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

# 업종별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2006년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차례>

1장. 서론 .....	5
1. 들어가는 말 .....	5
2. 수요조사의 대상업종 .....	6
3. 조사 내용 .....	7
4.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과 의의 .....	8
5. 소결 .....	11
2장. 업종별협의회 구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	13
1. 머리말 .....	13
2. 설문조사 개요 .....	13
3. 설문조사 결과 .....	15
4. 요약 .....	33
3장. 자동차업종협의회 필요성과 구축방안 .....	34
1.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추이와 현황 .....	34
2.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 .....	40
3. 자동차산업 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구축 방안 검토 .....	49
4장. 전력산업 노사정협의회 필요성과 구축방안 .....	53
1. 전력산업 노사관계 현황 .....	53
2. 전력산업 노사정협의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 .....	60
3. 전력산업 업종협의회 구성 검토 .....	79
5장. 보건의료 업종협의체 필요성과 구축방안 .....	85
1.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의 추이와 현황 .....	85
2. 보건의료산업 노사정협의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 .....	87
3.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구축 방안 검토 .....	100
6장. 결론 및 시사점 .....	103
참고 문헌 .....	107

<표차례>

<표 2-1> 설문지 수거 현황 ..... 15

<표 2-2> 업종 차원 산업정책이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 필요성 ..... 16

<표 2-3>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소속 조직의 참여에 대한 찬반 ..... 16

<표 2-4> 노사정위 공공특위 결의에 의한 전력산업 배전분할 정책 중단 인지 여부 ..... 17

<표 2-5> 업종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활동상황 인지 여부 ..... 17

<표 2-6> 노사정위원회법률 개정안의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치내용 포함 인지 여부 ..... 18

<표 2-7> 기존 업종별협의회의 장애 당사자 판단 ..... 19

<표 2-8>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노동조합측 ..... 19

<표 2-9>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노동조합측 ..... 20

<표 2-10>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사용자측 ..... 20

<표 2-11>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사용자측 ..... 21

<표 2-12>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정부측 ..... 22

<표 2-13>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정부측 ..... 22

<표 2-14>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노·사 공통 ..... 23

<표 2-15>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노사 공통 ..... 23

<표 2-16> 업종별협의회 구성시의 설치 방식 ..... 24

<표 2-17> 업종협의회의 성격 ..... 25

<표 2-18> 업종별협의회 구성주체 ..... 26

<표 2-19> 정부 및 공익대표의 참여 방식 ..... 26

<표 2-20>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정부(관계부처)의 역할 ..... 27

<표 2-21> 노·사 이외의 업종별협의회 참여 인사 (중복응답) ..... 27

<표 2-22>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 28

<표 2-23>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치하는 안에 대한 입장 ..... 29

<표 2-24> 업종별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 ..... 29

<표 2-25> 업종별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의 중요도 ..... 30

<표 2-26> 업종별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 (중복응답) ..... 31

<표 2-27> 업종별협의회 현실화 또는 활성화 방안들의 중요도 ..... 31

<표 2-28> 업종별협의회가 산별전환이나 산별교섭에 미칠 영향 .....	32
<표 3-1> 금속노조 중앙교섭 일정별 현황 .....	35
<표 3-2> 중앙교섭 및 사용자단체 참가사업장 현황 .....	37
<표 4-1> 전력연대 소속 노동조합 기초현황 .....	56
<표 5-1> 업종차원 산업정책, 현안 등 논의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	92
<표 5-2>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소속 조직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	92
<표 5-3>업종별 협의회 구성에서 가장 장애가 된 당사자 .....	93
<표 5-4>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주체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 .....	93
<표 5-5>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방식에 대한 선호 .....	94
<표 5-6> 업종별협의회 구성 주체 .....	94
<표 5-7> 정부 및 공익대표의 참여 방식 .....	95
<표 5-8>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정부(관계부처)의 역할 .....	95
<표 5-9>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	96
<표 5-10> 노사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협의회 설치에 대한 입장 .....	96
<표 5-11>업종협의회와 노사정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 .....	97
<표 5-12>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그 성격에 대한 입장 .....	97
<표 5-13>업종별 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의제의 중요도 .....	98
<표 5-14> 업종별협의회 주요 의제별 노사간 응답 비교 .....	99
<표 5-15> 업종별협의회 현실화·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사 응답의 비교 .....	99
<표 5-16> 업종협의회 구성이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나 산별교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 .....	100

## <그림차례>

<그림 4-1> 한국전력 및 자회사의 단체교섭 과정 .....	54
<그림 4-2> 전력산업 노사관계 변화와 노동조합 .....	59

# 1장. 서론

## 1.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현을 위해 중층적 교섭·협의체계의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에 따라 2003년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산하에 해당 부문의 외부전문가와 전문위원으로 TF팀을 구성해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필요성, 대상업종의 선정, 정책협의 영역,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이라는 정책과제 연구보고서가 결과물로 제출되었고, 2005년에는 업종별 협의회 구성관련 T/F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노사정위원회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중 기존의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개정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과 최근 한나라당의 노사정위원회 폐지 주장으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체계와 사회협약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중층적 협의구조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중층적 협의구조의 하나로 업종별 협의회가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협의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구성 주체에 따른 업종별 노사협의회와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출되고 있지 않고, 실제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및 추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협의가능한 영역 등에 관한 논의를 해당 전문가 혹은 노사정위원회 내부로 제한했으며, 협의회의 구축을 완결된 틀로 제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하고자 하는 업종별 협의회에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외부로부터의 유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 당사자 모두 적극적으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실제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주체인 노사 당사자의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업종별 협의회 논의 의제의 영역과 우선순위, 업종별 협의회 구성

의 전제조건과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요조사는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협의회 구축의 과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2. 수요조사의 대상업종

노사정위원회 업종협의회의 설치 대상 업종은 금속, 운수, 금융, 보건의료, 공공, 교육 등 6개 부문이고 이들 부문 산하에 다시 업종별 분과로 세분되고 있다. 이 경우 금속부문은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으로, 공공부문은 일반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으로, 금융부문은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운수부문은 궤도와 도로분과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들 6개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심층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종협의회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전력, 보건의료 3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이들 업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금속(자동차)부문: 민주노총 조직중 가장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방침에 대한 영향력도 강한 조직 규모를 가지고 있다. 2006년 6월 산별전환 가결 이후 내부에서 업종별 체계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된 바 있다.

산별체계와 관련해 자동차분과를 조직체계로 두자는 의견도 제출되었고, 과거 금속산업연맹 산하에 자동차분과 활동을 했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존재하며 새롭게 출범할 금속노조의 70% 이상을 자동차업종이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 업종 협의회의 실현 여부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의 조선, 기계, 철강 등 타업종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속(자동차)부문의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논의 의제, 장애요인 등을 파악할 경우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자동차업종에는 완성차 중심의 공업협회와 부품사 중심의 공업협동조합 2개의 사용자 조직이 존재하며, 금속산업관계사용자협의회는 자동차업종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자동차부품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3개의 조직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업종협의회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과 태도 또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전력부문: 민주노총 소속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하고 있으며 교섭도 5개 발전사가 집단교섭을 하는 형태이다. 여기에 한국노총 소속의 한국전력과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한수원 노동조합도 존재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발전노조는 2001년 파업 이후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직구조와 노사관계 지형을 보이는 조건에서 일상적 협의회 구조를 통한 교섭의제의 사전 조정 등의 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전환 이후 한편으로는 중앙집중 교섭구조를 선호하면서도 업종별 협의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노사정협의회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의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파일럿(Pilot) 사례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조사 내용

주된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1)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업종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 산별교섭과 업종협의회의 위상에 대한 판단
- 노동조합이 포괄하는 범위와 업종협의회의 포괄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위상에 대한 인식

#### 2)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논의 의제

-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논의해야 할 의제는 무엇인가?
- 노사 당사자가 가장 우선시하는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각 당사자가 우선시하는 의제들 중에 가장 논의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 쟁점은 무엇이며, 각 쟁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 3) 업종별 협의회 구성의 장애요인

-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장애요인은?
- 노사정의 측면에서 장애요인 파악함으로써 정부(혹은 노사정위원회)의 정책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도록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4) 업종별 협의회 현실적 구성방안

- 완성된 형태의 틀이 아닌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초동단계의 설정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즉,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현실적 경로에 대한 상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보도록 한다.

## 4.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과 의의

### 1) 국가수준 사회적 협의체제의 불안정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는 국가수준 사회적 협의체제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일조했으나 노사 중앙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 집권화된 통제력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수준 사회적 협의체제의 원활한 운영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최근 노사정간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 입법안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의 처리과정에서 보였던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 그리고 정부의 노경총 합의안 수용,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은 국가수준 노사정 협의체제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수준 사회적 협의체제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다양한 산업, 업종별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산업, 업종별로 특화된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어렵게 하거나, 혹은 산업, 업종별 당사자의 이해관계 편차에 따라 국가 수준 사회적 협의체제의 전반적인 논의과정의 원활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 2) 분권화된 노사관계 구조의 지속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한계를 절감한 노동조합들은 기업별노동



조합을 산별노동조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현재 민주노총은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의 44.9%(민주노총 내부자료), 한국노총은 25.05%(정승국, 2002) 산별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하 완성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9만 여명이 산별전환을 가결시켰고, 공공연맹에서는 3만 여명 규모의 공공서비스노조가 출범하였으며 사무금융연맹도 2007년 산별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또한 금속노련을 중심으로 자동차노련 등이 산별전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는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별체제로의 이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산별교섭은 그 진전 정도가 매우 더딘 편이어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등에서만 산별교섭의 초기 형태인 중앙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교섭 참가단위나 협약의 적용 범위, 교섭의제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 아직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별 교섭이 가지는 한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기업별 교섭이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기업별 교섭은 개별노동자의 이해를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업종) 수준 더 나아가 국가 수준의 이해와 결부시키기 어렵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이나 노동시장 구조변화, 노동자 내부의 격차 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기업별 교섭은 현재와 같이 대공장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특성상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실업자, 중소기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 3) 산별교섭체계와 협약 적용범위의 제한

현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로 전환한 경우 일정하게 산별 차원의 중앙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별 차원의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각 노조가 포괄하는 사업장 수보다 적거나 혹은 노동조합의 조직률 자체가 낮아 해당 산업이나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주요 대공장이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아서 해당 교섭단위의 범위가 협소해지는 반면, 금속노조에 포괄되지 않은 중소기업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협약적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후자의 경우 보건의료노조 등 기존의 산별노조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이다.

#### 4) 교섭의제의 협소함

교섭체계와 협약적용의 협소함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가 교섭의제의 협소함이라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교섭의제는 다분히 교섭구조를 집중시키기 위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노사간의 합의만으로는 해당 산업이나 업종의 노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교섭의제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은 노사간 합의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부의 산업정책적 방향이나 대안까지를 포함해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도 기업수준의 고용안정 방안과 함께 해당 산업, 업종 수준의 고용안정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어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조건에서 기업 수준의 고용안정 합의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산별노조가 제기하는 교섭의제들 중 중장기적으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업종협의회라는 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업종협의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점진적 접근

산별교섭을 통한 합의는 소속된 노사가 산별교섭 단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교섭체계, 협약적용, 교섭의제의 협소함과도 연관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업종협의회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협의회 참여 주체의 전략과 태도 등에 따라 문제제기 수준, 협의수준, 합의수준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제의 성격이나 논의되는 수준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업종협의회에서 논의되거나 협의되는 의제들이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어내고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수준 혹은 산업, 업종 수준의 사회적 협의기구는 참가단위의 전략이나 태도에 따라 상당한 굴곡을 그리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사회적 협의기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제의 선정, 의제의 논의수준, 논의 결과에 대한 합의수준 등에 대한 처리 과정상의 문제가 노정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정간 논의 과정에서는 노사가 교섭영역에서 보였던 경직적인 태도-요구의 제기와 합의의 강제를 위한-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중립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장치로 업종협의회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6)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장치로서의 업종협의회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노사파트너십의 구축에 기반을 두고 노사정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이 노사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영역이었다. 대립적 노사관계 지형에서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섭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구조와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정도에 대한 판단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제를 둘러싸고 보다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며 상호 조정의 여지가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인들은 노사정 당사자들이 노사파트너십 구축과정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후 노사정 협의체계의 안정적 이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선순환하는 과정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 5. 소결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그 위상이 제한되어 있고, 교섭에서는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이며, 산별교섭은 산업 전체의 의제를 다루기에는 그 역할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협의의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섭은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쟁점으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경우, 교섭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위협적 수단의 사용이 빈

변하며 이러한 강제력 동원의 정도에 따른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합의의 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진다. 또한 분배를 둘러싼 교섭이 파편화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없는 조건에서는 교섭을 통한 배분이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함으로써 오히려 분배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교섭으로만 해결하기 어렵거나 혹은 협의 수준에서라도 산업(업종)별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치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산업(업종)의 이해당사자 사이에 정책협의를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간 정보의 교류,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동시에 정책협의를의 장에서 자신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협의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별교섭의 한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산별교섭으로의 진전이 더딘 조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수준의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유력한 장치로서 업종별 협의회 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장. 업종별협의회 구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 1. 머리말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아래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특별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전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산업·업종별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구상에 대해 노·사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연구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바, 이 장에서는 그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 2. 설문조사 개요

업종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당사자 수요 조사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먼저 자동차, 전력 및 보건의료 산업·업종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 전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업종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 전반에 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업종 차원에서 산업정책 또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업종별협의회의 구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부분으로서, 여기에서는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한 입장, 업종별협의회의 참여에 대한 판단 등을 물었다.

둘째는 노사정위원회의 업종별협의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기존의 업종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운영해 온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

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노·사·정 각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묻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노사가 자신의 또는 상대방 및 정부 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과정에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업종별협회의 설치 및 운영 방식과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업종별협회의 논의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상설 여부와 협의 또는 합의기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둘째는 업종별협회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성범위는 노·사·정 대표 및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업종별협회의 구성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참여 주체의 결합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부 관련 부처 또는 노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노·사 당사자들이 구상하는 업종별협회의 위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업종별협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에 관한 것이다. 업종별협회가 구성되는 방식이 무엇이든지, 협의회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각 참여주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업종별협회의 구성부터 난항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넷째는 업종별협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부분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종별협회의 활동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과 업종별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는 협의회와 산별노조 또는 산별교섭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업종별협회가 활성화될 경우 산별노조 또는 산별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진은 업종별협회의 특정한 상을 미리 정하고 이에 대한 노·사 대표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협회의 필요성, 그리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질문함으로써 향후 업종별협회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설문지 작성 및 배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팀이 설문지 초안을 만든 뒤, 이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들과 같이 검토하여 수정·완성하였다. 그 후 조사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 작성하게 하거나(자동차 및 전력), 우편조사(자동차 및 보

건)를 실시하였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성차업체는 4개 사업체에 불과하므로,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 단위인 각 사업체 노·사로부터 한 부씩만 설문응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다수의 설문지를 완성차 사업체의 노사 관계 담당자 및 간부들에게 배포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사정이 유사한 전력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반면 자동차산업 부품업체 및 보건의료산업 노사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별로 한 부씩 노사 대표자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한 후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수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설문지 수거 현황

업종	분류	사용자	노동조합	계
자동차	완성차	15	21	36
	부품	9	9	18
	소계	24 (44.4%)	30 (55.6%)	54 (39.4%)
전력	발전	10	20	30
	배전	2	12	14
	소계	12 (27.3%)	32 (72.7%)	44 (32.1%)
보건의료	대형병원	11	10	21
	중소병원	8	10	17
	소계	19 (48.7%)	20 (51.3%)	39 (28.4%)
합계		55 (40.1%)	82 (59.9%)	137 (100.0%)

### 3. 설문조사 결과

#### 가. 업종별협업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당사자 태도

##### 1)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 판단 여부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각 업종 노사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2> 업종 차원 산업정책이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 필요성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한 편		필요한 편		매우 필요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3	7.1%	8	19.0%	28	66.7%	3	7.1%	42	100.0
	노동조합	4	8.2%	0	0.0%	24	49.0%	21	42.9%	49	100.0
업종	자동차	4	7.7%	4	7.7%	31	59.6%	13	25.0%	52	100.0
	전력	1	16.7%	1	16.7%	1	16.7%	3	50.0%	6	100.0
	보건의료	2	6.1%	3	9.1%	20	60.6%	8	24.2%	33	100.0
Total		7	7.7%	8	8.8%	52	57.1%	24	26.4%	91	100.0

먼저, 업종차원의 산업정책이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종별협의회의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 모두, 그리고 업종에 상관없이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필요성에 대한 강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 측에서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표 2-3>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소속 조직의 참여에 대한 찬반

구분		적극 반대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적극 찬성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3	5.6	16	29.6	33	61.1	2	3.7	54	100.0
	노동조합	2	2.5	6	7.4	46	56.8	27	33.3	81	100.0
업종	자동차	3	5.6	8	14.8	28	51.9	15	27.8	54	100.0
	전력	1	2.3	9	20.5	26	59.1	8	18.2	44	100.0
	보건의료	1	2.7	5	13.5	25	67.6	6	16.2	37	100.0
Total		5	3.7	22	16.3	79	58.5	29	21.5	135	100.0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무관하게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응답자가 소속된 조직이 업종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보면, 사용자 측 응답자들보다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의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업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업종 차원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응답자가 속한 조직이 협의회에 참여하여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수요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 2) 노사정위원회의 업종별협의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다음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인지도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이해 또는 오해의 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노사정위원회의 그간의 활동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 노사정위원회 및 산하 업종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제의 논의 및 해결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노사정위원회 활용방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설문 응답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활동 상황 및 그 성과에 대해서 그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업종별 의제 논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국 사회 특히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4> 노사정위 공공특위 결의에 의한 전력산업 배전분할 정책 중단 인지 여부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어느 정도 앎		아주 잘 앎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14	25.9	29	53.7	8	14.8	3	5.6	54	100.0
	노동조합	18	22.5	30	37.5	20	25.0	12	15.0	80	100.0
업종	자동차	18	33.3	27	50.0	8	14.8	1	1.9	54	100.0
	전력	4	9.1	11	25.0	15	34.1	14	31.8	44	100.0
	보건의료	10	27.8	21	58.3	5	13.9	0	0.0	36	100.0
Total		32	23.9	59	44.0	28	20.9	15	11.2	134	100.0

<표 2-5> 업종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활동상황 인지 여부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어느 정도 앎		아주 잘 앎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5	9.1	35	63.6	15	27.3	0	0.0	55	100.0
	노동조합	19	23.2	35	42.7	24	29.3	4	4.9	82	100.0
업종	자동차	11	20.4	30	55.6	12	22.2	1	1.9	54	100.0
	전력	8	18.2	22	50.0	11	25.0	3	6.8	44	100.0
	보건의료	5	12.8	18	46.2	16	41.0	0	0.0	39	100.0
Total		24	17.5	70	51.1	39	28.5	4	2.9	137	100.0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노사정위 공공특위의 결의에 따라서 전력산업 배전분할 정책이 중단된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측 응답자보다는 노동조합측 응답자들의 인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업종을 제외한 자동차·보건의료 업종 응답자들은 약 80% 이상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가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부 정문가 워크숍, 정책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표 2-6> 노사정위원회법률 개정안의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치내용 포함 인지 여부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어느 정도 앎		아주 잘 앎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9	16.4	38	69.1	8	14.5	0	0.0	55	100.0
	노동조합	21	25.6	33	40.2	27	32.9	1	1.2	82	100.0
업종	자동차	13	24.1	30	55.6	10	18.5	1	1.9	54	100.0
	전력	10	22.7	20	45.5	14	31.8	0	0.0	44	100.0
	보건의료	7	17.9	21	53.8	11	28.2	0	0.0	39	100.0
Total		30	21.9	71	51.8	35	25.5	1	0.7	137	100.0

특히 최근 개정된 노사정위원회법률에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았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로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의견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여부와는 별개로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상황 및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에 근거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의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활동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 3)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주체별 장애 요인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노사정 각 당사자들의 태도 및 상황이 어느 정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장애요인 중에서 노사정 각 당사자들의 어떤 점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7> 기존 업종별협의회의 장애 당사자 판단

구분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노·사		노·정		사·정		노·사·정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8	14.5	2	3.6	2	3.6	10	18.2	4	7.3	1	1.8	28	50.9	55	100.0
	노동조합	2	2.5	10	12.3	12	14.8	6	7.4	0	0.0	21	25.9	30	37.0	81	100.0
업종	자동차	4	7.5	4	7.5	3	5.7	7	13.2	2	3.8	7	13.2	26	49.1	53	100.0
	전력	3	6.8	5	11.4	10	22.7	2	4.5	1	2.3	9	20.5	14	31.8	44	100.0
	보건의료	3	7.7	3	7.7	1	2.6	7	17.9	1	2.6	6	15.4	18	46.2	39	100.0
Total		10	7.4	12	8.8	14	10.3	16	11.8	4	2.9	22	16.2	58	42.6	136	100.0

먼저, 기존의 업종별 협의회의 경험에서 볼 때,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가장 장애가 되는 당사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주체는 ‘노·사·정 모두’로, 응답자의 약 44%가 ‘노·사·정’ 모두가 중요한 장애 당사자였다고 응답하였다.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사용자측은 노동조합, ‘노·사’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노동조합측은 ‘사용자’, ‘정부’, ‘사·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 노동조합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노동조합측

구분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업종별 협의회의 합의나 결정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확신 부족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주체	사용자	3.45	4.32	4.22	4.65	4.67
	노조	3.14	3.49	3.96	3.67	4.39
업종	자동차	3.02	3.87	3.94	4.06	4.75
	전력	3.23	3.45	4.05	4.11	4.45
	보건	3.63	4.21	4.26	4.05	4.26
Total		3.27	3.83	4.07	4.08	4.51

\* 가장 낮은 값: 1, 가장 높은 값: 6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으로 노동조합 측 요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요인의 장애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은 낮게 평가되었다. 사용자 측 응답자의 답변에서는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방침’의 장애 정도를 다른 요인들보다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9>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노동조합측

구분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업종별협의회의 합의나 결정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확신 부족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8	15.4	7	13.5	3	5.8	18	34.6	16	30.8	52	100.0
	노조	5	6.7	9	12.0	17	22.7	9	12.0	35	46.7	75	100.0
업종	자동차	3	6.3	9	18.8	3	6.3	14	29.2	19	39.6	48	100.0
	전력	4	9.8	1	2.4	8	19.5	7	17.1	21	51.2	41	100.0
	보건	6	15.8	6	15.8	9	23.7	6	15.8	11	28.9	38	100.0
Total		13	10.2	16	12.6	20	15.7	27	21.3	51	40.2	127	100.0

노동조합 측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은 것은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문제였다. 사용자 측 응답자들은 ‘상급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업종별 응답의 특징을 보면,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응답에서 전력 업종 응답자들의 지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업종 노동조합들의 조직적 분화와 조직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0>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사용자측

구분		사용자단체의 권한 미비로 인한 사용자의 대표성 부족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업종별협의회의 합의나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확신 부족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주체	사용자	4.06	4.13	4.00	3.56	4.58
	노조	4.07	4.33	4.19	4.29	4.37
업종	자동차	3.88	4.38	4.23	3.94	4.48
	전력	4.16	4.11	4.02	3.95	4.35
	보건	4.20	4.23	4.06	4.06	4.57
Total		4.06	4.24	4.11	3.98	4.46

\* 가장 낮은 값: 1, 가장 높은 값: 6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사용자측 장애 요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그리고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사용자 측 응답자들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측 요인에 대한 사용자측 응답의 양상과 유사하다.

<표 2-11>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사용자측

구분		사용자단체의 권한 미비로 인한 사용자의 대표성 부족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업종별협의회의 합의나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확신 부족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7	14.6	6	12.5	7	14.6	3	6.3	25	52.1	48	100.0
	노동조합	10	13.9	13	18.1	11	15.3	15	20.8	23	31.9	72	100.0
업종	자동차	5	11.4	8	18.2	6	13.6	8	18.2	17	38.6	44	100.0
	전력	6	14.3	7	16.7	4	9.5	6	14.3	19	45.2	42	100.0
	보건의료	6	17.6	4	11.8	8	23.5	4	11.8	12	35.3	34	100.0
Total		17	14.2	19	15.8	18	15.0	18	15.0	48	40.0	120	100.0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사용자 측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이었다.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력업종의 경우 ‘업종별 협의회의 합의나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확신 부족’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목된 반면,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되어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다른 한편,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정부측 장애요인 점수는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및 노동자측 장애요인에 대한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서 노·사 양측의 응답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그리고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의도’에 대한 응답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응답자의 문제제기가 비슷하게 부정적이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의 문제 제기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12>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정부측

구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협의, 합의 등 결정사항의 불이행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의도
주체	사용자	4.52	4.04	4.02	4.54	3.85
	노조	4.81	4.60	4.97	4.52	4.78
업종	자동차	4.58	4.10	4.48	4.21	4.23
	전력	4.80	4.50	4.64	4.68	4.50
	보건	4.70	4.58	4.65	4.79	4.48
Total		4.69	4.37	4.58	4.53	4.39

\* 가장 낮은 값: 1, 가장 높은 값: 6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정부 측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 등이었다.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장 많이(40.0%) 지목하였으나, 사용자 측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를 가장 많이(42.9%) 지목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업종 응답자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한 반면, 보건의료업종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목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보건의료업종의 응답에서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의도’를 지목한 응답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업종에서 그동안 노사간 자율적인 산별 교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3>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정부측

구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협의, 합의 등 결정사항의 불이행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의도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19	38.8	2	4.1	5	10.2	21	42.9	2	4.1
	노조	18	24.0	5	6.7	30	40.0	10	13.3	12	16.0	75	100.0
업종	자동차	18	37.5	0	0.0	14	29.2	10	20.8	6	12.5	48	100.0
	전력	10	24.4	4	9.8	12	29.3	7	17.1	8	19.5	41	100.0
	보건	9	25.7	3	8.6	9	25.7	14	40.0	0	0.0	35	100.0
Total		37	29.8	7	5.6	35	28.2	31	25.0	14	11.3	124	100.0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14>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장애요인 - 노·사 공통

구분		업종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의 인식 차이	현안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노사간 강조점의 차이	업종 수준의 노사간 대화와 협의의 경험 부재	업종별협의회의 기능과 업종(산업)교섭의 구분이 애매한 점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
주체	사용자	4.38	4.42	4.16	4.31	4.57
	노조	4.47	4.46	4.16	3.95	4.85
업종	자동차	4.52	4.46	4.00	4.04	4.89
	전력	4.36	4.34	4.18	4.09	4.66
	보건	4.40	4.56	4.35	4.18	4.63
Total		4.43	4.44	4.16	4.10	4.74

\* 가장 낮은 값: 1, 가장 높은 값: 6

한편,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장애가 되는 노·사 공통의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 항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협의회의 기능과 업종별 교섭의 구분이 애매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 응답 점수보다 사용자 측 응답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 항목 점수에서는 자동차업종의 응답 점수가 여타 업종 응답점수에 비해 더 높았고, ‘업종 수준의 노·사간 대화와 협의의 경험 부재’ 항목에서는 보건 업종의 응답 점수가 더 높았다.

<표 2-15>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가장 큰 장애요인 - 노사 공통

구분		업종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의 인식 차이		현안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노사간 강조점의 차이		업종 수준의 노사간 대화와 협의의 경험 부재		업종별협의회의 기능과 업종(산업)교섭의 구분이 애매한 점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9	19.6	13	28.3	5	10.9	5	10.9	14	30.4	46	100.0
	노조	24	33.3	10	13.9	9	12.5	4	5.6	25	34.7	72	100.0
업종	자동차	14	31.1	10	22.2	3	6.7	4	8.9	14	31.1	45	100.0
	전력	8	20.5	5	12.8	6	15.4	5	12.8	15	38.5	39	100.0
	보건	11	32.4	8	23.5	5	14.7	0	0.0	10	29.4	34	100.0
Total		33	28.0	23	19.5	14	11.9	9	7.6	39	33.1	118	100.0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노사 공통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힌 것은 ‘업종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의 인식차이’ 및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보면, ‘업종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노사의 인식 차이’ 항목에서 노동조합 측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 측 응답에서는 ‘현안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노사간 강조점의 차이’에 대한 지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노·사 양측 모두 상대방 조직의 상급단체들이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 업종별 협의회 구성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노·사간 상호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부측 요인에 대해서 노·사 양측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중요하게 지목하는 한편, 사용자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서,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다. 이로부터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 양측 사이의 신뢰의 회복, 정부의 중립적인 태도와 추진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나. 업종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방식

#### 1) 업종별협의회의 논의 방식

다음으로,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방식 및 성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설기구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협의기구화 또는 합의기구화에 대한 의견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16> 업종별협의회의 구성시의 설치 방식

구분		비상설로 현안 중심 한시적 운영		상설기구로 정기회의에서 안건 논의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29	54.7	23	43.4	1	1.9	53	100.0
	노동조합	8	10.0	72	90.0	0	0.0	80	100.0
업종	자동차	18	34.6	33	63.5	1	1.9	52	100.0
	전력	11	25.0	33	75.0	0	0.0	44	100.0
	보건의료	8	21.6	29	78.4	0	0.0	37	100.0
Total		37	27.8	95	71.4	1	0.8	133	100.0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업종별협의회의 설치 방식으로는 전체적으로 ‘상설기구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주체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사용자측 응답의 경우 ‘비상설’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노동조합측 응답의 경우 ‘상설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용자측은 업종별 협의회가 상설화하는 경우 노사관계 관련 다양한 의제가 논의에 부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 측은 상설화하여야 업종별 협의회로부터 노사간 현안 및 의제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7> 업종협의회의 성격

구분		협의기구		합의기구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34	64.2	17	32.1	2	3.8	53	100.0
	노동조합	28	35.4	49	62.0	2	2.5	79	100.0
업종	자동차	23	44.2	28	53.8	1	1.9	52	100.0
	전력	21	48.8	20	46.5	2	4.7	43	100.0
	보건의료	18	48.6	18	48.6	1	2.7	37	100.0
Total		62	47.0	66	50.0	4	3.0	132	100.0

한편 협의기구 또는 합의기구에 대한 선호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사용자 측 응답자들은 협의기구화를,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합의기구화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상설화, 비상설화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와 연동된 것으로서, 사용자 측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업종별 협의회의 비상설화 및 협의기구화를 선호하며,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업종별 협의회의 상설화 및 합의기구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업종별협의회 참여주체 구성방식

업종별 협의회의 참여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참여 주체, 정부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업종별협의회 구성주체에 대한 입장에서는 ‘노·사·정·공익 대표’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노·사·정 대표’로 하자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업종의 응답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사 대표’로 하자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건의료 및 전력 업종에서 ‘노·사·정·공익 대표’로 하자는 응답 비율이 상대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적으로 높았다.

<표 2-18> 업종별협의회 구성주체

구분		노·사 대표		노·사·정 대표		노·사·공익대표		노·사·정·공익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6	11.3	20	37.7	3	5.7	24	45.3	53	100.0
	노동조합	16	19.8	25	30.9	9	11.1	31	38.3	81	100.0
업종	자동차	16	30.2	17	32.1	2	3.8	18	34.0	53	100.0
	전력	3	6.8	14	31.8	8	18.2	19	43.2	44	100.0
	보건의료	3	8.1	14	37.8	2	5.4	18	48.6	37	100.0
Total		22	16.4	45	33.6	12	9.0	55	41.0	134	100.0

정부 및 공익대표의 참여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 분포를 보였다.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사용자 측 응답에서는 뚜렷이 부각되는 선호가 보이지 않았다.

<표 2-19> 정부 및 공익대표의 참여 방식

구분		노·사 주도, 공익대표 참석		노·사 주도, 정부대표 참석		노·사 주도, 정부·공익 참석		노·사·정 주도, 공익 참석		노·사·공익 주도, 정부 참석		노·사·정·공익 동등 참여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4	7.5	11	20.8	11	20.8	11	20.8	10	18.9	6	11.3	53	100.0
	노조	14	17.9	9	11.5	24	30.8	11	14.1	9	11.5	11	14.1	78	100.0
업종	자동차	9	18.0	10	20.0	11	22.0	7	14.0	5	10.0	8	16.0	50	100.0
	전력	4	9.3	5	11.6	12	27.9	9	20.9	10	23.3	3	7.0	43	100.0
	보건	5	13.2	5	13.2	12	31.6	6	15.8	4	10.5	6	15.8	38	100.0
Total		18	13.7	20	15.3	35	26.7	22	16.8	19	14.5	17	13.0	131	100.0

업종별협의회 구성 시 관계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노·사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20>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정부(관계부처)의 역할

구분		논의주체로서 주도성 발휘하며 적극 참여		노·사간 자율적 논의 지원 수준에서 참여		노·사간 협의 지원위해 공익위원 추천 수준 참여		협의회 논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방식으로 참여		노·사 자율영역 이므로 참여 또는 개입 금지		기타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12	22.2	30	55.6	6	11.1	2	3.7	3	5.6	1	1.9	54	100.0
	노조	8	9.9	42	51.9	10	12.3	7	8.6	13	16.0	1	1.2	81	100.0
업종	자동차	4	7.5	29	54.7	7	13.2	6	11.3	7	13.2	0	0.0	53	100.0
	전력	6	13.6	22	50.0	6	13.6	1	2.3	8	18.2	1	2.3	44	100.0
	보건	10	26.3	21	55.3	3	7.9	2	5.3	1	2.6	1	2.6	38	100.0
Total		20	14.8	72	53.3	16	11.9	9	6.7	16	11.9	2	1.5	135	100.0

한편, 노·사 이외의 업종별협의회 참여 인사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다른 경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21> 노·사 이외의 업종별협의회 참여 인사 (중복응답)

구분		노·사 추천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		노사정위 관계자		노사정위 추천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기타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48	90.6	40	75.5	32	60.4	33	62.3	22	41.5	28	52.8	5	9.4	53	40.2
	노조	70	88.6	38	48.1	47	59.5	45	57.0	52	65.8	52	65.8	3	3.8	79	59.8
업종	자동차	43	84.3	27	52.9	27	52.9	26	51.0	24	47.1	27	52.9	3	5.9	51	38.6
	전력	41	95.3	27	62.8	31	72.1	29	67.4	29	67.4	32	74.4	3	7.0	43	32.6
	보건	34	89.5	24	63.2	21	55.3	23	60.5	21	55.3	21	55.3	2	5.3	38	28.8
Total		118	89.4	78	59.1	79	59.8	78	59.1	74	56.1	80	60.6	8	6.1	132	100.0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개자로서 주도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자는 노동조합 측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고, 후자는 사용자 측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의료업종에서는 노사정위가 ‘매개자로서 주도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동차업종 및 전력업종에서는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수준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사용자 측 응답자들보다 노동조합 측 응답자들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2> 업종별협의회 구성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구분		매개자로서 주도성 발휘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		당사자간 자율적 논의 지원 수준 참여		협의 지원위한 공의위원 추천 수준 참여		협의 또는 협의회 사업위한 예산 지원 수준 참여		논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조사연구 등 방식 참여		노·사간 자율영역 이므로 참여 또는 개입 금지		기타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21	38.9	18	33.3	7	13.0	1	1.9	4	7.4	3	5.6	0	0.0	54	100.0
	노동자	15	18.5	37	45.7	7	8.6	6	7.4	10	12.3	4	4.9	2	2.5	81	100.0
업종	자동차	12	22.6	21	39.6	7	13.2	5	9.4	5	9.4	3	5.7	0	0.0	53	100.0
	전력	7	15.9	20	45.5	4	9.1	1	2.3	6	13.6	4	9.1	2	4.5	44	100.0
	보건	17	44.7	14	36.8	3	7.9	1	2.6	3	7.9	0	0.0	0	0.0	38	100.0
Total		36	26.7	55	40.7	14	10.4	7	5.2	14	10.4	7	5.2	2	1.5	135	100.0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선호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자 측 응답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노사정위원회의 지원 역할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측 응답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지원 역할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노사정위원회가 업종별 협의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업종별 협의 자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2-23>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치하는 안에 대한 입장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인 편		긍정적인 편		매우 긍정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2	3.7	19	35.2	31	57.4	2	3.7	54	100.0
	노동조합	3	3.8	19	23.8	51	63.8	7	8.8	80	100.0
업종	자동차	3	5.8	16	30.8	32	61.5	1	1.9	52	100.0
	전력	1	2.3	16	36.4	23	52.3	4	9.1	44	100.0
	보건의료	1	2.6	6	15.8	27	71.1	4	10.5	38	100.0
Total		5	3.7	38	28.4	82	61.2	9	6.7	134	100.0

업종별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주체별로는 노동조합 측 응답에서 ‘별도 설치’ 응답이 많았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노사정위 안에 협의회를 설치’하자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 측의 경우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고, 노동조합 측의 경우 여전히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2-24> 업종별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

구분		노사정위 안에 협의회 설치		노사정위와 별도 설치		별도 설치하고, 필요시 공동 논의		우선 별도 설치 후, 적절한 시기에 노사정위 안에 설치		기타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용자	24	44.4	8	14.8	18	33.3	3	5.6	1	1.9	54	100.0
	노동조합	15	19.2	23	29.5	33	42.3	6	7.7	1	1.3	78	100.0
업종	자동차	10	19.6	16	31.4	22	43.1	3	5.9	0	0.0	51	100.0
	전력	17	38.6	7	15.9	14	31.8	5	11.4	1	2.3	44	100.0
	보건의료	12	32.4	8	21.6	15	40.5	1	2.7	1	2.7	37	100.0
Total		39	29.5	31	23.5	51	38.6	9	6.8	2	1.5	132	100.0

3) 업종별협의회의 의제

업종별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로 제시된 것들 중에서 그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관련 산업·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체별로 볼 때, 사용자 측에서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의제로는 ‘노사관계 안정,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과 ‘고용유연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의제로는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및 노동복지와 관련된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용자는 고용유연성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5> 업종별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의 중요도

구분		노사 관계 안정, 노사 협력 증진	산업 구조 조정 및 고용 조정	산업 안전 및 노동 복지	노동 시장 정책 통한 고용 창출	고용 안정 방안	임금 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고용 유연성	노동자 의 경영 참가 및 재산 형성	인적자 원개발 및 직업훈 련프로 그램 개발· 운영	비정 규직	산업· 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	산업· 업종의 임금· 근로 조건 등의 가이드 라인
주 체	사용자	4.55	4.09	4.06	4.09	4.13	3.60	3.94	3.17	3.72	3.58	4.11	3.70
	노조	3.95	4.43	4.62	4.59	4.92	4.14	3.14	4.31	4.08	4.76	4.87	4.06
업 종	자동차	3.86	4.40	4.44	4.50	4.64	4.04	3.76	3.86	3.88	4.22	4.44	3.60
	전력	4.32	4.27	4.18	4.20	4.57	3.91	3.18	3.86	3.82	4.34	4.89	4.20
	보건	4.49	4.17	4.57	4.46	4.59	3.78	3.41	3.81	4.14	4.30	4.35	4.00
Total		4.19	4.29	4.39	4.39	4.60	3.92	3.47	3.85	3.93	4.28	4.56	3.92

\* 가장 낮은 값: 1, 가장 높은 값: 6

업종별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반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증진과 관련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 측 응답에서는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사 간 최우선 의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향후 의제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노사관계안정, 노사협력 관련 사항’이 모든 업종에서 중요한 의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외에 자동차업종에서는 ‘고용안정 방안’을, 전력업종에서는 ‘전력산업의 전망 및 정책대안 마련’을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표 2-26> 업종별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 (중복응답)

구분	노사관계 안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고용안정 방안		임금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고용 유연성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재산형성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비정규직		산업·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		산업·업종의 임금·근로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	33	61.1	14	25.9	6	11.1	13	24.1	7	13.0	7	13.0	6	11.1	0	0.0	2	3.7	6	11.8	9	17.6	6	11.1	54	40.6
	노	20	25.3	20	25.3	13	16.5	8	10.1	24	30.4	9	11.4	0	0.0	4	5.1	3	3.8	19	24.1	24	30.4	14	17.7	79	59.4
업종	자동차	18	35.3	13	25.5	10	19.6	13	25.5	17	33.3	4	7.8	3	5.9	3	5.9	3	6.9	6	11.8	9	17.6	3	5.9	51	38.3
	전력	15	34.1	13	29.5	4	9.1	3	6.8	8	18.2	5	11.4	1	2.3	1	2.3	1	2.3	5	11.4	20	45.5	12	27.3	44	33.1
	보건	20	52.6	8	21.1	5	13.2	5	13.2	6	15.8	7	18.4	2	5.3	0	0.0	1	2.6	11	28.9	6	15.8	5	13.2	38	28.6
Total	53	39.8	34	25.6	19	14.3	21	15.8	31	23.3	16	12.0	6	4.5	4	3.0	5	3.8	22	16.5	35	26.3	20	15.0	133	100.0	

### 4) 업종별협의회의 활성화방안

<표 2-27> 업종별협의회 현실화 또는 활성화 방안들의 중요도

구분	쟁점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 협의의 기초를 모색하는 활동	노·사 공동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조정역할 강화	노·사간 상호 신뢰의 확보를 위한 사전 대화창구의 개설	실천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모범적 사례의 개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업종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검토	총연맹 차원의 업종협의회 참가에 대한 방침 결정	업종별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 보장
주체	사용자	4.11	3.81	4.26	4.25	4.23	4.28
	노조	4.39	3.60	4.29	4.12	4.47	4.85
업종	자동차	4.07	3.46	4.15	4.17	4.36	4.48
	전력	4.52	3.76	4.40	4.19	4.36	4.79
	보건	4.24	3.89	4.30	4.16	4.39	4.58
Total	4.27	3.69	4.28	4.17	4.37	3.83	4.61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업종별협의회의 현실화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업종별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종별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존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들 사안들은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5) 업종별협의회와 산별교섭

업종별협의회와 산별교섭은 상호 보완 또는 대체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묘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업종별협의회가 산별전환이나 산별교섭에 미칠 영향

구분		업종별협의회 활성화하면 산별노조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 약해질 것이다		업종별협의회 활성화하면 산별노조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 강해질 것이다		업종별협의회와 산별노조·산별교섭 은 무관한 문제이다		Total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체	사	18	33.3	19	35.2	17	31.5	54	100.0
	노	10	13.0	56	72.7	11	14.3	77	100.0
업종	자	8	16.0	25	50.0	17	34.0	50	100.0
	전	10	23.3	27	62.8	6	14.0	43	100.0
	보	10	26.3	23	60.5	5	13.2	38	100.0
Total		28	21.4	75	57.3	28	21.4	131	100.0

업종별협의회와 산별전환 및 산별교섭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업종별협의회가 활성화하면 산별노조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이 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약해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비중도 과반수를 넘었다. 사용자측 응답은 양자간의 관계가 무관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노동조합 측 응답의 경우 산별노조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이 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특히 협의회와 교섭 간의 상호보완효과 또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 4. 요약

설문조사 결과, 업종별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수요는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업종별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의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지, 그 동안 업종별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가 수행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곧바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사 당사자들 간의 상호신뢰 부족과, 노·사 양측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정부는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 전례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고, 노사정위원회는 당장 노·사 당사자들이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협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협의회의 위상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협의회의 상설화 및 합의기구화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나 노사정위원회가 특정한 방식을 미리 확정하고 노·사가 이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 협의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열린 접근이 당분간 필요하며, 또 업종별, 의제별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사 중에서도 특히 노동조합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다는 것은 역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상황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업종 차원, 더 나아가서 전국 차원에서 노·사(정)간 대화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노동조합 측에서는 협의회와 교섭 간의 상호보완관계 또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이 마련된다면 업종별 협의회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

### 3장. 자동차업종협의회 필요성과 구축방안

#### 1.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추이와 현황

주요 완성차기업의 노동조합은 모두 민주노총의 핵심노동조합으로 전국 노사관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기아자동차의 부도,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2001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2006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시도 등 장기과업을 경험한 바 있고, 이는 곧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이어져 전국적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98년 IMF 직후 노동조합의 대대적인 양보교섭과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저지투쟁 이후 금속산업연맹 차원에서 산별전환을 시도했고 2001년 금속노조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당시 완성차 노동조합들은 산별전환 투표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부결됨으로써 모두 금속노조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금속산업연맹은 자동차부품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와 완성차 노동조합을 포함한 일부 기업별 노동조합 등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3년 현대자동차가 다시 산별전환 총회를 진행했으나 부결됨으로써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전환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2006년 6월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조합과 연맹 소속 노동조합 등 모두 9만여명이 산별전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최대의 금속노조는 한국최대의 산별노조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21일 금속노조의 산별완성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체계와 조합비 배분안 등 주요 내용에 관한 규약을 개정하고, 2007년 2월 중순 15만 금속노조의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까지 확정함으로써 향후 금속산업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지형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15만명으로 추산되는 통합 금속노조의 조합원 중 자동차업종에 소속된 조합원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4만여명의 금속노조가 진행하던 중앙교섭에 한국 노사관계의 핵이자 거대규모의 완성차 노동조합을 포함한 9만여명이 새롭게 합류해야 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는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가. 금속노조의 교섭과정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속노조의 교섭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대각선교섭을 통해 2002년의 지부집단교섭을 요구했고, 2002년에는 지부집단교섭에서 기본협약을 각 지부별로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일괄 타결하였고, 2003년에는 사용자들이 먼저 중앙교섭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2006년까지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교섭이 진행된 일정별 현황을 보면 2003년에 1차 교섭일자가 5월 6일로 가장 늦었으나 다른 해에 비해 전체 진행과정은 크게 늦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사용자측이 중앙교섭을 요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 1차 교섭 예정일이 빨라졌음에도 전체 진행 일정은 대동소이하다. 2005년을 기점으로 사용자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안을 제시하는 것이 6월말, 노조의 집중파업은 7월 중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체로 노조의 집중파업기간과 집중교섭기간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차원의 파업기간은 2003년부터 매년 9일, 6일, 8일, 9일로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 금속노조 중앙교섭 일정별 현황

항 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차 교섭예정일	5/6	3/25	4/12	3/30
노조요구안 설명	5/27 4차	4/22 6차	6/7 9차	5/16 6차
조정신청일	6/11	6/4	6/15	6/9
쟁의행위투표일	6/18	6/9	6/22	6/19
사용자안 제시 차수	6/17 7차	6/17 14차	6/28 12차	6/27 11차
1차 파업일	6/25	6/16	5/25(사전), 6/29	6/21
집중파업기간	7/2-4(1차), 7/9-11(2차)	6/29-7/1	7/12-15	7/12-14
최종 파업일	7/15	7/6	7/15	7/25
집중교섭기간	7/3-15	6/30-	7/1-19	7/11-
의견접근	7/15 13차	7/6 20차	7/19 18차	7/25-26 19차
잠정합의중앙위승인		7/6(중집에 위임)	7/22	8/16
잠정합의(서명)일	7/15	7/6 20차	7/26 19차	-
잠정합의안 투표	8/19-20	8/17-19	8/10-12	8/29-31
조인식	8/22	조인식 못함	2006/1/25	9/5(예정)
비고		잠정합의안 승인은 중집에 위임	5/25 파업은 2004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사전투쟁	

한편 2003년부터 파업이 진행된 양상을 보면, 2003년은 2일 이상 연속 파업을 전개한 것이 3회, 2004년은 1회, 2005년은 1회, 2006년 2회로 나타나고 있다. 1차 파업일부터 최종 파업일까지는 2003년과 2004년 20여일, 2005년은 16일(그러나 이행합의 촉구 파업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길어진다), 2006년은 35일이 걸렸다. 이것은 완성차 노동조합이 자체 임단협 교섭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의 교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 나.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

금속노조의 요구는 2001년에는 ‘2002년 집단교섭을 한다’는 것과 ‘단체협약 전문의 체결 주체를 금속노조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는 우선 금속노조의 출범을 통해 모든 교섭의 주체가 금속노조임을 회사가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것과 기업별 교섭을 최소한 지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2002년에는 2001년의 합의를 배경으로 각 지부별 공히 기본협약을 통일적으로 요구하고 지부 차원의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이들 지부의 교섭현황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면서 점차 기업별 교섭의 관행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2년까지의 요구는 금속노조의 실체 인정과 교섭구조를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요구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앙교섭이 실시됨에 따라 임금과 사업장내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통일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민주노조 운동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2003년은 주5일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보호, 금속노조 조합활동, 산업안전보건 등을 주요요구로 제출하였고, 2004년은 손배가압류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을, 2005년은 산업공동화 대책, 산별최저임금,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활동보장, 우리쌀 사용을, 2006년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신기계도입과 공장이전시 대책, 사내하청 처우개선, 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로 제출하였다. 합의는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를 금속노조 전체 차원에서 규율한다는 의미가 크다.

### 다. 중앙교섭 및 사용자단체 참가사업장 현황

사용자단체의 구성까지 과정을 보면 2002년 하반기에 전국노사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3년 중앙교섭 이후 2004년에는 경총의 교섭참가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진전되었다. 이후 2005년 교섭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2006년 초 노동부의 법인 인가가 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권한을 갖는 사용자단체가 출범하였고 2006년 중앙교섭에 임하였다.

그러나 중앙교섭 및 사용자단체 참가사업장 현황을 보면 전체 지회수에 비해 참가 지회수가 50-60개 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 임단협에 돌입한 지회를 대상으로 비교하더라도 그 수치는 100여개로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하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애초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중앙교섭 참가를 합의해놓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지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회 조직력이 약하거나 회사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3-2> 중앙교섭 및 사용자단체 참가사업장 현황

항목	2003년	2004년 6.14현재	2005년 7.26현재	2006년 8.6현재
전체 지회수	162		200	204
임단투돌입 지회		161개	173	162
조정신청			149	
기본협약/중앙교섭 합의 지회	100	107개		114
참가 지회수	100	101	95	88(사용자단체)

### 라. 금속노조의 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전체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우선, 노동조합의 총력 투쟁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5월말-6월초에 집중되던 투쟁일정은 6월 중순에서 2006년은 7월 중순으로 늦춰지고 있다. 이의 주된 요인은 금속노조의 요구가 교섭구조를 집중화시키기 위한 것에서, 중앙교섭이 진행된 이후 점차 사용자들에게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는 요구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둘째 사용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춰갈 수록 사용자들 내부의 응집력과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앙교섭이 시작된 이후 교섭 초반은 교섭방식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사용자들이 노조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안을 제시하고 이어 곧바로 타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섭시작부터 타결까지 전 기간 동안 교섭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의를 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 이에 대해 교섭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노동부, 2004). 이에 대한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곧바로 안을 제출할 경우 노조의 대응이 그에 따라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과 이와 동시에 지부교섭과 지회교섭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앙교섭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사업장 내에서의 암묵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면서 지부-지회교섭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교섭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섭전략은 중앙교섭 기간 동안 사업장 수준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큰 쟁점을 만들지 않으면서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갈등의 외부화와 동시에 협상의 내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조합원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들이 사업장 수준의 대각선교섭을 통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부품이 아니면서 지불능력이 큰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일정하게 시장독점적 성격을 가지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경우일수록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도 일정하게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속노조 전체의 조직력으로 해당사업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사업장 내부의 지회 조직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량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속노조가 가진 조직력과 투쟁력이 사업장 내부의 노사간 역학관계에서 규정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금속노조의 교섭과정을 요구내용별로 보면 중앙교섭은 조합원의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단초를 놓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업장단위에서는 임금이나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업장 고유의 단체협약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성 복지조건의 경우는 산별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중앙교섭에서 다루지 못하고 지부의 영향력 하에서 교섭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업장 수준의 대각선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간 지불능력의 격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한꺼번에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불능력의 격차는 대기업의 경우 상당기간 중앙교섭에 합류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임금, 근로조건이 사업장 단위에서 주되게 결정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교섭구조

집중화의 유인은 그만큼 적을 것이며, 여기에 사업장 지회의 역량이 사용자를 강제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 마. 통합 금속노조의 교섭 영향 요인

통합 금속노조는 완성차 노조 등 신규 가입한 노조들을 포함한 중앙교섭을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완성차 회사가 중앙교섭에 참여할 전망은 불투명하며 교섭구조를 둘러싼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완성차 회사의 조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완성차 중에서도 금속노조의 중심 역할은 현대-기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GM 대우와 쌍용자동차는 외국기업 소유라는 점에서 기업간 이해관계의 조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적인 노동조합의 동력 또한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별체제 이행이나 산별교섭과 관련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산별체제의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커질 것이지만 이는 노사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사례에만 기초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금속노조 내부의 다양한 격차, 즉 규모, 업종,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관계 등에 따른 격차와 이해관계, 현안문제의 다양성 등을 조정 통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금속노조 교섭 요구의 내용적 통일성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게 하며, 새로 합류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앙교섭 구조의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망하게 한다.

### 바. 금속노조 통합 과정에서의 업종체제 논의

완성차노조의 산별전환 이후에 금속노조의 조직체제와 교섭체제를 둘러싼 내부 논의에서 업종별 조직체제와 교섭체제를 갖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14만명 중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이 80%의 비율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종별 조직체제와 교섭체제를 갖출 경우 금속노조 내부의 업종간 편차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업종별 조직체제는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2.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

### 가. 필요성 검토

자동차산업에서 업종 차원의 노사정협의들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는 금속노조 요구의 내용과 수준에서 나온다. 이미 금속노조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용안정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발전 전망과 정책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이나 현재의 중앙교섭에서 노사간 교섭사항으로만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혹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안정 방안을 다룬다면 금속노조가 정부의 산업정책에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 차원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산별노조로서의 기능을 너무 협소하게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용창출, 인적자원관리 역량의 개발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은 노사간 교섭(협의)만으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금속노조 내부의 업종별 특화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불투명함이다. 이러한 전망은 우선 금속노조 내부에 업종별 교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다. 금속노조는 당분간 중앙교섭에 집중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교섭방침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지부-사업장 교섭으로 이어지는 교섭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업종별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통합 금속노조 교섭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업종별 교섭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금속산업연맹 당시에도 자동차분과가 존재했으나 이러한 분과활동이 자동차분과에 대응하는 사용자와의 협의틀을 만든 경험도 거의 없다. 여기에 금속노조에서 자동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때문에 업종별 교섭이나 업종별 조직체계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대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셋째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종에 고유한 현안문제나 정책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업종 고유의 문제를 교섭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교섭 영역에서 다루기 힘든 각종 의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에 모든 것을 교섭에서 다룬다면 노사간 쟁점이 격화되고, 소모적인 대립적 지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섭은 교섭이



일정하게 진행된 이후에는 합의될 것을 전제로 하는 배분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금속노조의 교섭은 해당 교섭단위 전체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섭안건의 수준이 낮더라도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적 대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 교섭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전 조율, 조정, 의사탐색의 과정을 밟을 필요도 있다. 업종협의회는 이러한 기능을 교섭구조 밖에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의 수요 검토

#### (1) 면접조사 결과

##### A. 사용자측 입장

<완성차 사용자측>

피면접자: 완성사 기획담당

일시: 2007. 1. 5

- 필요성 인식
  -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라는 틀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 논의 틀
  - 논의틀은 업종별 노사 당사자 전체가 동의되는 선에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노사정 협의회 틀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당위적인 형태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논의틀을 형성하는데 관건은 정부의 입장과 태도라고 생각한다.
- 의제 사항
  -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이와 관련된 산업 차원의 문제는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요하는 현안문제를 의제 사항으로 올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술개발 등 그간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다루었던 의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전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당장 노사정간에 자신들의 요구만을 놓고 협의 의제로 올리게 되면 논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요인

-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산업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측면이 강하다. 지금까지 노사관계든, 아니면 고용창출, 지역발전,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등 모든 영역에서 노사정 협의라는 틀로 이야기되면 거의 모든 요구나 부담이 회사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역협의회라는 틀에서 논의된 것만 해도 그랬다.
- 특정 회사에 그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 형태로는 곤란하다. 수준이나 형태는 다르겠지만, 정부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산업을 육성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미묘해질 수 있다.

### <부품 사용자측>

피면접자: 1차 부품업체 노무담당자

일시: 2006. 12. 29

- 기본적인 입장

-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이미 지역 노사정 간담회 등에 여러번 참석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라는 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협의틀

- 노사정 간담회나 협의회를 하게 되면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노사정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불참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다. 이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정 관계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회사야 정부쪽에서 요청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다만 문제는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이 빠지게 되면 노사정 협의를 자체가 성립이 안될 것이다.

- 완성사와 부품사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성사와 부품사는 조건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다가 공동의 의제를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격차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다.

- 의제

- 노조든 회사든 서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야 양쪽 다 참가가 가능할 것이다. 회사야 사실 정부나 노조가 요구하게 되면 끝까지 거부할 입장이 못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협의회 틀 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참가유인이 생길 것이다.
-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할 아니면 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어느 정도는 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섭처럼 어느 한쪽이 요구를 내놓고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방식으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의제가 뭐가 있을지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 우선 어떤 의제를 따지기 전에 상호 정보공유라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제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 장애요인

- 노조 상급단체의 방침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노사정 간담회가 있을 때 노조 쪽에 참석을 요청하면 상급단체의 지침 때문에 노사정 협의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며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참석한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이든 업종이든 노사정 협의의 틀 자체에 대해 노조 중앙에서 뭔가 방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노조 하부조직들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갈 수 있지 않겠나 한다.
- 또 하나는 업종 내에도 규모나 지불능력 등 편차가 큰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다.

### B. 노조측

<완성차노조>

□ 피면접자 : 완성차노조 상집간부

□ 일시 : 2006. 11. 30

- 업종협회의 구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
  - 산별노조가 산업별로 크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업종 특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
  - 동일 산업내에도 업종별 편차(특수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
  - 교섭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문제나 안전에 대한 사전 논의의 장으로도 필요
- 낮은 조직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
  -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 한국노총의 경우도 동일업종을 포함시켜 논의하면 될 것
- 협의회 논의사항
  - 업종별 시장정책 전망과 활성화 방안 등
  - 고용안정과 신규고용 창출 대안 논의
  - 업종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 해당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방향과 이로 인한 문제점 등 개선
- 가장 우선해야 할 의제
  - 고용안정과 신규고용 창출 대안 논의
  - 양극화해소
- 사용자의 수용 여부
  - 고용안정과 신규고용 창출에 관한 대안 논의라면 사용자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
  - 양극화 해소에 관한 사항은 비정규직 문제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
-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서 장애요인
  - 경영진의 일방적 독단성 문제
  - 정부와 사용자의 유착관계로 이에 대한 불신이 존재
  - 노사간 신뢰부족
- 장애요인 극복방안

- 상호 신뢰의 구축이 필요, 투명성 확보로 신뢰확보 기반 쌓아야
- 업종별 협의회 구성 이전에 필요한 조치
  - 산별노조의 실체 인정
  -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 정부의 참여나 지원
  - 필요하다

### <부품 노조>

□ 피면접자: 1차 부품업체 노조간부

□ 일시: 2006. 1. 8

-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
  -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업종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모른다.
  - 자동차부품사 간에는 금속노조의 지부 차원의 집단교섭을 수행했던 단위가 있는데, 규모나 업종간 차이가 있어서 교섭 과정에서 회사간 의견조율이나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동종업종별로 좀 더 세부적인 논의 단위를 형성하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노동조합 내에서도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가동시켜서 지역내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포괄하는 조직 규모가 커져야 분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견해가 다수다.
  - 실제로 지역 차원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 노동부나 시청 등과 특정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경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자체는 거부감이 크다.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 협의 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틀을 가동시키기에는 노사정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 협의틀
  - 조합원 정서나 현장 간부들의 정서가 노사정위원회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다만 노-정, 노-사 정례협의회라는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고 본다.

- 경충, 경실련, 노동조합 등 지역내 많은 주체가 모여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공통의 과제를 도출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던져놓고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경우가 많아 논의가 모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노조의 입장에서는) 당장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을 고집하기보다는 노-정, 노-사 협의회라는 틀로 접근을 해보고, 정부의 자동차산업 담당부서, 공업협회 등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우선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다.

### ● 의제

- 사실 이 부분(업종별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아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완성과 부품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완성과 부품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것이 산별노조의 원리상으로는 맞는데, 완성과 부품의 조건 차이가 너무 크다. 특히 원-하청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품사는 같이 가면 모양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는 사실상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사정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협의를 할 경우 그 의제가 모두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의제라도 제출하는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이 합의되든지 간에 합의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노사정협의회의 틀이 유지될 수 있다.

### ● 현실적 접근 방안

- 우리 지역에서 임금이 아닌 것을 교섭할 때, 요구로 제기하고는 정례협의회를 실무 차원에서 진행한 적이 있다. 실무차원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이나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회의에 넘겼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 합의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공동조사나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당장 교섭틀만이 아니라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금속노조 내부에서는 완성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분과체계나 분과별 공동활동, 교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업종 차원의 정책이나 현안문제에 대한 업종별 요구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장 내부에서 업종별 의제나 ‘노사정’이라는 틀을 전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 처음부터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고집하기 보다는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상급단체>

- 피면접자: 금속연맹(노조) 정책담당자
- 일시: 2006. 1. 4

#### ●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

- 노사정 위원회나 노사정 업종별 협의회라는 틀 자체는 필요하다.
- 산업정책이나 거시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자부 등 정부측과 테이블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차원이든, 업종차원이든 노조와 사용자간 관계에서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 협의를

-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특히 과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노조 내부에 크게 작용한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서 합의한 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들러리만 서고 당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조직내에 강한 편이다.
- 따라서 노정교섭(협외), 노사교섭(협외) 틀을 먼저 만들고 교차하면서 노사정 틀을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산자부나 정부관련 부처와의 노정교섭(협외)틀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정한 성과가 나와 향후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보건이나 금융, 공공 등은 나름대로 노사정 위원회든 협의회든 하고 있는데, 금속은 정부와의 창구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보 공유라도 먼

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완고하고 관료적이면서 노조와 대화하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도 잘 해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정도도 안되는 상태에서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라는 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산업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도 잘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상호신뢰에 대한 전망이 생기면 가능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토론회나 워크숍, 정기간담회 등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

-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 노사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많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조직내에서 이러한 틀을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금속노조가 안정되는 시기가 되면 업종별 대표성이 일정하게 확보될 것이기도 하고, 업종별 요구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과는 다른 수준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금융이나 공공쪽이 자주 만나는 것은 정부가 사용자라는 특수성과 정부쪽 관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정부와의 협의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틀이 필요한데, 금속은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과는 다르다.

- 의제

- 노조가 제기했던 불공정거래 문제나 원하청 하도급관계에서 공존공생하는 문제, 산업공동화, 고용안정 정책 등 산업별 의제는 상당히 많다. 특히 산업별, 업종별 현안문제와 관련해 정부정책과 연관되는 영역이면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이런 의제를 한꺼번에 쏟아 놓고 논의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제로 올려서 다룰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정책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다. 일단 노조 내부의 정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틀에 대한 준비 정도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장애요인

- 우선 정부쪽 태도를 들 수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틀 자



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크다. 금속이 공공부문과 다르기도 하고, 특히 지금 민주노총이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때문에 더더욱 노사정 협의회라는 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 다음으로는 업종별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준비 정도나 노사정 협의회라는 틀 자체에 대한 고민 정도가 덜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 3. 자동차산업 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구축 방안 검토

#### 1) 업종별 협의회의 가능성 검토

자동차산업의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에서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자동차산업에서의 업종별 노사정협의체에 대한 수요는 일단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산업에서의 업종별 노사정협의체가 단기간에 구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업종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노사 모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지역 노사정협의체와는 달리 전국단위 업종별 노사정협의의 논의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한데서 오는 관심과 정보의 결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의 노사정 협의체는 공공부문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노사 공히 전국 수준의 노사정협의의 틀과 지역수준의 노사정협의의 틀 이외에 업종 수준의 노사정 협의의 경험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노동조합 내부의 업종별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업종별 협의체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공식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정’ 협의의 틀 자체에 대한 조직 내부의 논의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업종별 현안문제나 장기적 전망, 정책과 관련된 업종별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사정 위원회의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자동차산업에서의 업종별 노사정 협의의 틀은 민주노총의 방침과 함께 금속노조 내부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금속노조의 내부 논의과정을 촉발시키기 위한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사정’ 협의의 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선은 노-정, 노-사간 협의의 틀이 먼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정간 정보공유 등 가장 기초적인 상호신뢰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노사정 협의의 틀에 결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조건과 이해관계의 다양함이다. 사용자 측에서도 완성사의 입장과 부품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규모나 지불능력 등의 조건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조건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조정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는, 업종별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사 양측 모두 업종별 노사정협의의 틀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협의의 틀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노사정 협의의 틀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기존의 노사정협의의 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 협의회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 내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노동조합 내부의 논의를 시작하게 만드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사정 협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 자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협의틀

업종협의회의 틀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상설기구로 정기회의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는 비상설로 할 경우 협의 안전이 협의 수준으로만 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장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 주체는 노사대표, 노사정대표, 노사정 공익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는 노사정 협의회의 공식적인 틀을 내세우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조건들이 노동조합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에 대한 신뢰감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의 속성상 정부에 대해 종속적이거나 기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정하게 정부 쪽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충분한 정보의 제공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설문 응답비중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사정위원회가 처음부터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기 보다는 주변 여건을 만들어어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은 업종별 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에 대해 별도 설치하고해야 한다거나, 별도 설치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논의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의틀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노사간 일정하게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우선 노-정간 협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용자측은 완성과 부품간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사정이 참가하는 틀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조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완성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초점과 부담이 완성사에게만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품사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회사간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은 자동차산업 내부에서도 완성과 부품, 규모의 차이 등을 감안해서 일정하게 그룹별로 노사정 협의의 틀 자체를 형성하기 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의제

업종별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없다. 교섭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대체로 정부정책과 연관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노사 당사자에게 일

정한 성과를 부여하거나 혹은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성과가 부여될 것이라는 전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문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노사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나 혹은 수립된 정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배경 설명, 정책 시행의 향후 영향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은 노사정 협의의 틀을 구축하거나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로 고용안정 방안,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안정 및 노사협력 관련사항,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부적이고 교섭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제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노사정협 의회의 의제는 정부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전망과 이에 따른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의제를 두고 단계적 협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장. 전력산업 노사정협의회 필요성과 구축방안

### -전력산업 업종별협의회 설치 수요 검토-

#### 1. 전력산업 노사관계 현황

##### 1) 전력산업의 노사관계 구조

전력산업의 노사관계 구조를 단체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계열화된 분권적 교섭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전력산업은 주요 필수서비스 부문으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노사관계 제도상으로도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임금가이드라인, 경영평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행정부 및 입법부의 강한 예결산통제와 운영 과정에 대한 인적 통제에 의해 제약되며 이로 인해 노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력은 크게 제약되고 있다. 한편,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노사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강제중재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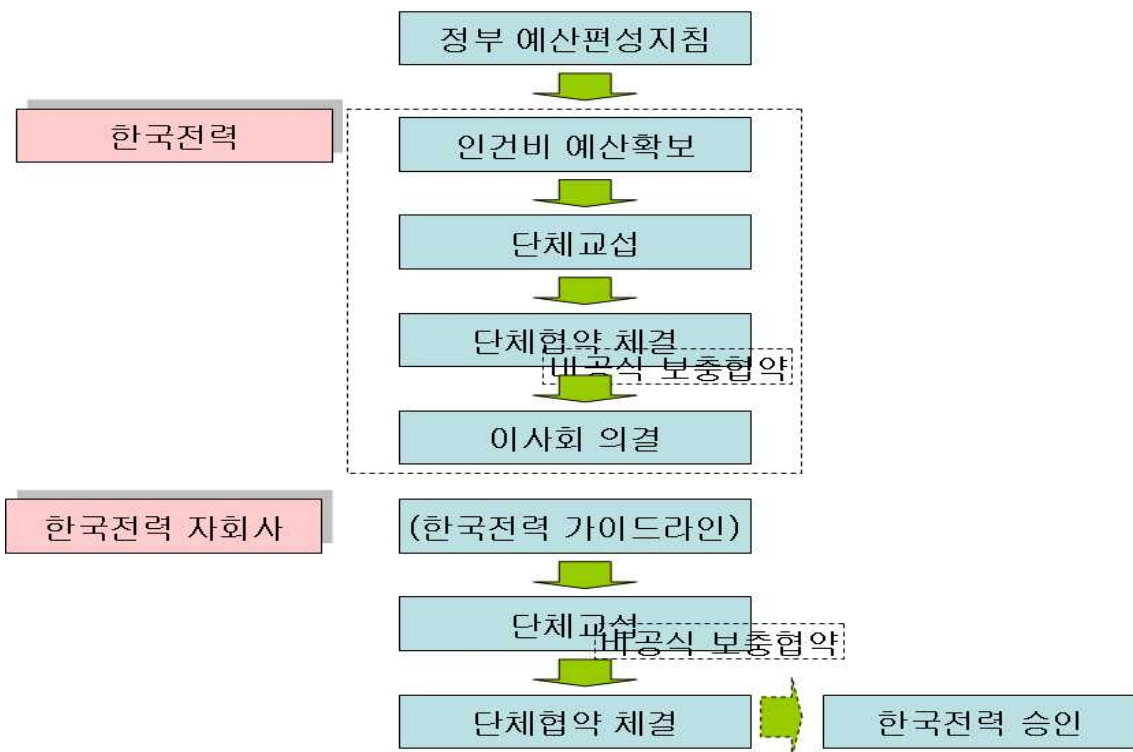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과 그에 계열화된 소수의 자회사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자회사 간의 계열관계가 단체교섭에도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한국전력의 단체교섭이 일종의 유형설정자 역할을 하며 자회사들의 단체교섭에는 한국전력에서 이루어진 단체교섭의 결과를 포함한 한국전력 사용자측의 비공식적 압력이 작용하며 이러한 압력은 단체교섭 개시 단계와 단체협약 체결 단계에 모두 존재한다. 한편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정부채투자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영향 하에 놓이며, 한국전력의 내부감사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의 대상이 된다(노조간부 인터뷰).

마지막으로 전력산업의 단체교섭 형태는 5개 발전회사에서의 집단교섭과 한국전력을 비롯한 나머지 자회사 및 출자회사들의 기업별 단체교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개 발전회사와 발전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집단교섭의 양상을 띠면서 분권적 교섭구조가 크게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구조조정기 이후 기업의 분화와 함께 단체교섭의

분권성은 다소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6년에 처음 단체협약이 체결된 발전 노사의 집단교섭은 발전회사 노사관계의 집중화를 낳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전 노사의 집단교섭은 임금인상율과 수당을 결정함으로써 회사간 임금격차를 강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교섭과는 별도로 사업체별 보충교섭을 두고 있다. 사용자측의 경우 집단교섭과 노사관계 조율을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의 노사업무실을 두어 3개월마다 각사별로 순환하며 노사업무실 업무를 관장하면서 노조에 대응하고 있다. 노사는 집단교섭이 일정한 성과와 안정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투명성도 증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발전 노사 면접조사 결과). 그러나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용자측과는 달리 노조측은 집중화된 교섭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의 예산통제가 작동하고 있고 노조측의 단체행동에 대한 산자부 등의 직접적인 지침이 사용자측에 전달되어 영향을 미치는 등, 정부의 규제와 사용자측의 피동성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여전하며 이 점이 대립적 관계가 불식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발전노조 간부 면접조사).

<그림 4-1> 한국전력 및 자회사의 단체교섭 과정



### 2) 전력산업 주요 노동조합

전력산업의 주요 노동조합들로는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하 한수원노조), 한전기공노동조합(이하 한전기공노조),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이하 한전기술노조),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이하 한전산업개발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이하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전KDN노동조합(이하 한전KDN노조), 파워콤노동조합(이하 파워콤노조) 등 9개 조직이 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전력 관련 노조 연대회의>(이하 전력연대)를 결성하여 공동 활동을 펼쳐왔다. 이중 발전노조, 한수원노조, 한전기공노조, 한전기술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전KDN노조 등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을 조직한 노조들이고, 한전산업개발노조와 파워콤노조는 한국전력의 출자회사를 조직한 노조들이다.<sup>1)</sup> 한전 출자회사 관련 노조 중에는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과 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업종 및 상급단체의 차이 때문에 전력연대에 합류하여 활동하지 않고 있다.

전력산업 노동조합들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 전력노조)이다. 전력노조는 전력 분할 구조조정 이전에는 조합원 수가 약 3만명에 달하는 대형 노조였다가 발전부문 6개 자회사의 분할 이후 현재는 조합원 수가 15,781명에 이르고 있다. 전력노조의 외형상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이지만 한일병원을 제외한 자회사 노조 조직들이 모두 독립함에 따라 현재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전력노조의 조직세는 구조조정기 이후에 크게 약화되었으나, 구조조정 대응 과정을 통하여 조직 내부의 민주적 개혁에 일정 정도 성공함으로써 내부 결속이나 의사소통에서의 하의상달은 과거보다 증대한 것으로 평가된다(보고서 제2장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분석 참조).

2001년 이후 전력산업 노사관계에서 영향력을 높여온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 5개 발전 자회사들을 조직하고 있는 발전노조를 들 수 있다. 발전노조는 소산별노조로 조합원수는 약 6,338명이며, 그 전투적 성향으로 인해 관심을 끌어들였다. 최근 발전노조는 관련 사용자들과 집단교섭 틀을 형성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전력 부문에서 유일하게 집중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사용자간의 대립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1) 자회사와 출자회사의 구분은 한국전력이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자회사가 최대주주인 경우에 해당함.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4-1> 전력연대 소속 노동조합 기초현황

노 조 명	설립연도 (년)	조합원수 (명)	상근자 (명)	조직형태	조직	상급단체
전국전력 노동조합	1961	15,781	23	소산별2)	44개지부 229개분회	한국노총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	2001	6,338	13	소산별	5개본부 38개지부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수력원자력노 동조합	2001	4,290	10	기업별	7개지부 30개분회	독립노조
한전기공 노동조합	1979	3,311	8	기업별	39개지부 (7개분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1987	1,180	6(1)1)	기업별	-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1995	2,482	5	기업별	11개지부 54개분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전원자력연료노 동조합	1989	466	2	기업별	-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전KDN 노동조합	2001	1,036	4	기업별	16개지부	한국노총 정보통신연맹
파워콤 노동조합	2000	500	2	기업별	21개지부	한국노총 정보통신연맹
전 체	-	35,384	73	2개 산업별 7개 기업별	-	6개 조직

자료: 각 노조 문의.

주1: 한전기술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6명(사무원 포함 8명), 현인원 1명임.

주2: 전국전력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과 출자회사인 한일병원 직원을 조직하고 있음.

위의 9개 전력산업 관련 노동조합들이 2003년 7월 3일 출범시킨 전력연대는 2002년에 결성된 ‘한국전력 자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모태로 하여 여기에 전국전력노동조합이 합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력연대는 조직의 목표로써 ▲ 산별노조 건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 근로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일방적이며 획일적인 모든 구조조정 거부 ▲ 단위 사업장의 부정부패 감시 및 척결 등을 내걸었으며, 특히 전력산업에서의 독자적인 산별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전력연대의 산별노조 추진은 앞서 언급한 노동조합체제의 제도적 변화 전망 등 몇 가지 상황적 계기도 작용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계열사 노동조합들로서 정부의 한국전력에 대한 노사관계 규제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산별노조 추진에는 내외부적으로 몇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들의 성향이 분화되어 있고 소속



상급단체의 갈래도 다기하다는 점이 중요한 제약요인이다. 대표적인 두 노조인 전력노조와 발전노조 집행부의 운동성향 차이가 상당하고, 9개 노조들 중 3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5개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데다가 9개 노조의 소속 상급단체 수가 5개에 이르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제도화가 3년간 유예되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이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건설함으로써 이들의 독자적인 산별노조 결성의 유인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 2) 전력산업 노사관계 전개 추이

전력산업 노사관계는 1990년대 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1998.8)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갈등의 무풍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취지로 1단계로 발전부문을 화력 부문 5개 자회사 및 수력 및 원자력 부문 1개 자회사 등 총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뒤, 2단계로 발전회사의 민영화 및 배전부문을 6개 지역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전력산업은 어느 부문보다도 격렬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노조측은 이를 ‘분할민영화’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999년부터 가시화된 한국전력에서의 노사갈등은 한국전력의 노사관계를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도의 갈등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급기야 2002년 겨울에 발전 및 배전 부문의 분할 문제를 이슈로 발생한 이른바 ‘발전파업’은 전력산업 노사관계 사상 최초의 파업으로 무려 37일간 지속되었다.

노조의 파업을 겪고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배전/발전 부문의 ‘분할’은 이루어지고 ‘민영화’는 중단된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반면, 이 과정을 통하여 노사관계에는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 변화는 한국전력 노사를 축으로 한 담합적 · 협력적 관계와 집중적 구조가 보다 대립적인 관계와 분권적인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담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갖고 있던 이 부문의 전통적 노사관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야기하면서 균열이 발생하였다(산업자원부, 2003). 우선, 정부의 통제 하에서도 고용안정과 공복의식에 의해 유지되었던 노동자들과 사용자와의 심리적 계약이 구조조정에 의해 크게 파열되면서 노사간 및 조직내 불신의 증대, 조직충성도의 약화, 고용불안감의 증대 등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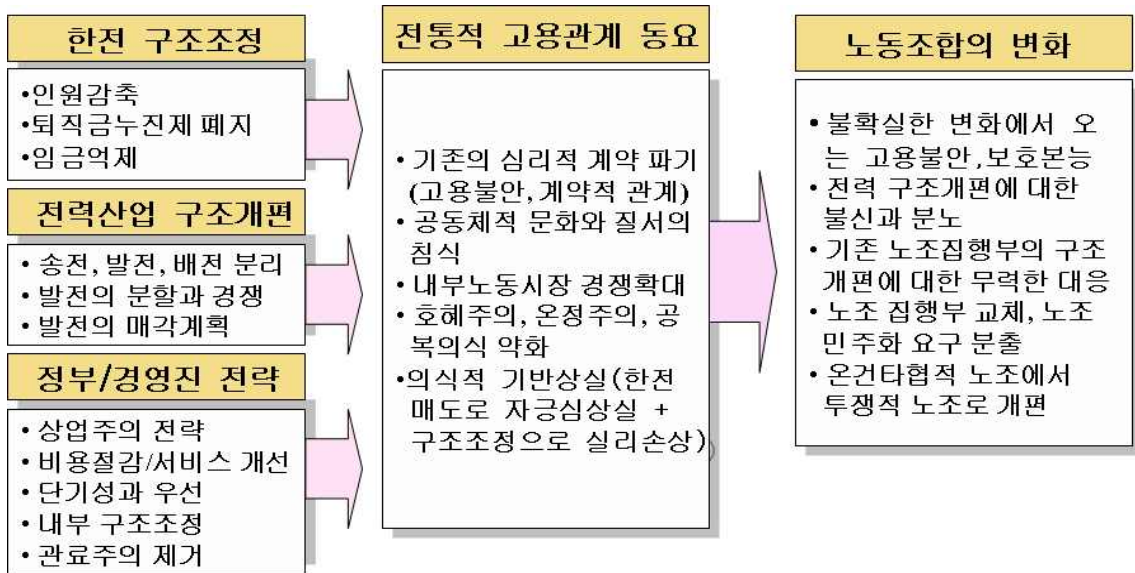
대립적 노사관계의 의식적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전력의 분할을 통해 발전 및 배전 부문에서 총 6개의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새로이 생겨났는데, 이들 조직에 속한 직원들은 분할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을 통해 분할을 반대하였으며, 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전력 내부도 1999년부터 추진된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저항이 거듭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중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 내부의 '민주화'가 활성화되면서 위원장 직선제 등 일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발언에 더 민감한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국전력뿐 아니라 (주)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의 일부 자회사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면서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대립의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전력의 분할을 통해서 6개의 새로운 자회사들이 생겨나면서 노사관계 역시 과거 한국전력의 노사를 중심축으로 했던 집중성이 약화되었다. 6개의 신생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기업별노조가, 5개 발전회사들에서는 일종의 산별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이 단일한 노동자 대변조직으로 새로이 생겨났는데, 특히 발전노조는 2002년 '발전파업'을 거치고 이후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에 가입하면서 전력산업의 대표적인 전투적 노조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전력을 중심축으로 하던 기존 노사관계를 충분히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전력산업 노사관계에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는 대략 3가지 환경 요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노동조합측의 구조 집중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요한 환경요인으로는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체제에 대한 새로운 제도화,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온 노조진영의 산별노조 결성 확산, 정권교체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노조측 염려의 새로운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부터 가시화된 <전력 관련 노조 연대회의>(이하 전력연대)를 축으로 한 전력산업 관련 노동조합들의 연대 움직임은 이후 전력산업 산별노조 결성 결의, 사용자들에 대한 공동교섭 제안 등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제도화가 3년간 유예되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연맹이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건설함으로써 전력산별노조 결성의 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전력연대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관련 노동조합들의 조직적 집중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지는 다소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가이드라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의 제도화, 정권교체 전망의 불확실성, 공공부문에서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의 확산 등 노동조합들이 집중화를 추진할 유인들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2> 전력산업 노사관계 변화와 노동조합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전력산업 노사관계는 하나의 과도적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조조정기를 경유하면서 기존의 평화적 · 협력적 노사관계의 디딤목이 되었던 주요 조건들이 해체되거나 그럴 위기에 놓였으며, 대립적 노사관계의 기반이 확장되었다. 반면, 노사간의 새로운 심리적 계약의 기반이 될 만한 안정적인 고용계약의 구조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어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노사간 세력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용자 주도성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노조들의 전투적 행동들이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사용자 주도의 안정성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측 역시 조직적 집중성이나 여타의 제도적 자원들을 통해 자원동원 능력을 확충한 상태는 아니어서 간헐적인 대립과 역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산별노조인 발전노조의 등장, '전력연대'를 통한 산별노조 건설 추진 시도 등은 이 부문 노사관계가 또다른 재편기를 겪게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적 상태의 특징은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향방을 결정지을 정치세력의 재편기인 현재부터 노동조합체제

의 제도적 전환이 현실화될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2. 전력산업 노사정협회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

#### 1) 필요성 검토

전력산업에서 업종 차원의 노사정협회의 필요성 근거는 크게 보아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 인력, 인사 통제가 결과적으로 노사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제약하는 데서 비롯되는 노사/노정간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대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써 업종 노사정협회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부문 노사관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궁극적인 결정권이 정부에 있는 반면, 단체교섭은 결정권이 제약된 사용자와 노조 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궁극적인 주인인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통제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지배구조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가 하는 데에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까지 전력산업을 비롯한 공기업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일련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특유의 지배구조에 대한 상호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계속 증대해 왔다는 점에 있다. 유럽에서 정부 통제 하의 노사관계라는 공공부문의 제약을 해소하는 한 형태는 노조로 하여금 공기업 지배구조나 정책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업 내 지배구조에서도 노조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 틀에서도 정보공유나 정책협회의 가능성을 배제시킴으로써 공공부문 특유의 제약이 노사관계 상의 불만으로 전이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화과 협의의 기회 부족'이 문제이며, 핵심적으로는 '정부의 일원적 결정권이 너무 많고 노동자들의 참여 기회는 제약된' 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노사정협회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둘째는 노사관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집중적 노사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 기제로써의 필요성이다. 그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내

에서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노사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대립의식의 사회화, 파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스타일, 외부자 배제 구조(이중 노동시장 구조)의 촉진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현실화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그간 정부의 규제를 비공식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기업 노사간의 담합과 비공식적 거래가 존재해 왔지만, ‘주인 없는 경영’의 특징이 농후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립성의 기반이 확장된 현재에도 이러한 담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규제의 강화를 통해 무원칙한 담합의 소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갈등의 저변만 확장시키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결국 공공부문에서도 ‘협의된 규제’와 ‘노사관계의 외부화’를 통해 갈등의 저변을 축소시키고 노사관계를 보다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집중적 노사관계의 촉진에 업종별 노사정협의 틀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노사관계 이슈와 관련된 필요성이다. 전력산업은 2000년대 들어와 산업구조 재편을 둘러싸고 노사관계상의 갈등이 격렬하게 증폭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전력산업의 구조재편이 곧 ‘민영화’와 ‘기업분할을 포함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현 정부 들어 중단되었지만,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의 기업분할과 조직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과 고용불안을 야기함으로써 노사관계 갈등의 중심 이슈가 되었다. 또한 정치권력 재편기 이후에 민영화나 추가적인 조직분할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향후 전력산업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체제의 제도적 전환과 함께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조건의 보호와 고용안정 대책의 마련’이라는 산출을 낳지 못하는 구조조정 또한 공정성 측면에서 승인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업종별 노사정 협의는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과정적 및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업종별 노사정 협의의 필요성은 당사자들의 시각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정부 입장에서 전력산업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불안정은 국민과 경제 전반에 제공되는 필수서비스인 전력서비스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전력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조의 도전을 자신이 지닌 강제력을 동원하여 굴복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대립적 태도를 구조화함으로써 ‘노조의 도전과 정부의 억압’이 반복되는 ‘만연화된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내구적인 상호작용의 틀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신이 지닌 결정권의 부분적인 제한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통제능력의 회복과 전력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 입장에서 업종 차원 노사정협의의 가치는 정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특수한 유인이 존재한다. 전력산업의 기업은 한국전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력관계와 조율방식 역시 한국전력을 정점으로 한 위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노사관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상대적 독립성이 뚜렷하며 이는 한국전력노동조합이 노동조합들 내에서 분명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상대적 독립성이 강해지고, 자회사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독자 행동이 강할수록 기업들간의 조직위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노사관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셋째로 노동조합은 업종별 노사정협의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업종 노사정협의는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1) 예산제약으로 인한 이해실현 제약조건을 타개하는 발판이 될 수 있고, (2) 집권성과 연대주의의 실현을 위한 산별노조체계로의 전환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더 나아가 노동조합은 이러한 틀을 공공서비스노동조합주의를 계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전력산업에 관련된 노사정의 합리적인 전략 선택의 옵션으로써, 그리고 이 부문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전개를 위하여 업종별 노사정협의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만하다고 보여진다.

### 2) 전력산업 노사정협의의 수요 검토

여기에서는 전력산업 차원의 노사정협의체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업종별 노사정협의의 전망을 가늠해 해보기로 한다.

#### (1) 면접조사 결과

##### 가. 한국전력 사용자측

□ 피면접자: 한국전력 노무처 실무담당자

□ 면접일시: 2006.12.18 16:00-17:00

• 필요성 인식

- 피면접자는 한국전력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종 차원 노사정 협의체 설치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그 이유로는, 첫째, 노사정협의체에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사안 중 구조조정에 관련된 사항들은 송변전 등 해당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노사업무팀에서 주관하여 다루기 힘들다는 점, 둘째, 향후 노사정협의체가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산별교섭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찬성하기 힘들다는 점, 셋째, 관련된 사항이지만 업종 차원에서 자회사에 대한 근로조건 애로사항이 논의된다면 자회사가 부담을 미룰 소지가 있고, 사실상 전력노조와 한전이 책임과 부담을 전담하는 교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 지금도 자회사들이 자사의 노사관계 문제를 한국전력에 와서 해결하려 드는데, 노사정협의로 인해 집중적 노사관계가 앞당겨진다면 이런 양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력 사용자측은 업종별 노사정 협의가 제도화되어 참여를 강제 당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입장을 피력하였다.
- 이를 전제할 경우 협의 틀과 의제, 기능에 따라서는 업종 차원의 논의 틀 자체의 필요성을 쉽게 부인할 수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구조개편처럼 당사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노사관계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으로 풀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구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배후의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공기업 노사관계 특성 상 노조의 이런 요구가 전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든 현재의 노사관계 틀로는 답답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 공기업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해결할 능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다른 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점에서는 만약 '산별교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노사정협회가 있을 수 있다면

이는 공기업 노사관계에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논의 틀

- 피면접자는 노사정위원회법이 업종별협회의 상설화를 강제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설화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문제를 다루는 비상설적 협의체가 더 낫다고 보았다.
- 또한 불가피하게 상설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만 중요한 구실을 하는 정도로 그 역할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정부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가 직접 교섭해 버리고 사용자측은 주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편, 논의가 노사정위원회 외부보다는 노사정위원회 틀 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그 이유로는 공기업 노사관계에서의 협의라는게 업종이 되었던 단사가 되었던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역할은 필요한데, 정부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틀로 노사정위원회법에 기반한 것 외에 다른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노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업종 협의 틀이 되려면 현행의 공기업 관리제도가 노사관계가 좀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1999년 관리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진의 경영자율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주어진 예산 틀 안에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주요 정책 등은 거의 정부의지가 반영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 공기업으로서 일정한 정부 통제는 불가피하겠지만 자율성이 더 주어지길 바란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바람이었고, 특히 예산편성지침이나 임금가이드라인 등에서 유연성이 확대되길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노사정 협의에서 사용자측의 지속적인 주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노사정협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

- 노사정의 행태 개선

- 피면접자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특별위원회의 경험을 한국전력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 모델케이스 같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 무엇보다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련된 공공부문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노조측은 투쟁일변도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사용자와 정부에 제시해서 설득했



던 새로운 면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협약하고 위협적인 표현방식이나 인격모독을 가하는 태도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런 태도들 때문에 노조측의 협의나 협상 의지가 의심받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부 또한 기본적으로는 노사에 대해 건전한 세력으로 보기보다는 이기주의 추구 세력이나 통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나. 발전회사 사용자측

□ 피면접자: 통합 노사업무팀 실무자

□ 일시: 2006.12.18. 14:30-15:30

#### ● 기본 입장

- 발전회사 노무부서의 피면접자는 업종별협회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피면접자에 따르면 업종별협회는 기존의 노사간 관계에 옥상옥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되어 노사관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의 노사관계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현재 발전회사 노사관계는 소산별 체제로 노조도 하나이고 노무팀도 연합체제이며 단체교섭도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현행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노무부서의 입장인데 만약 업종 노사정협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전력 전체의 산별노사관계를 촉진할 우려가 있고 이는 노사간 역학관계에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사용자측도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그 리스크를 검토해보지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산별노사관계를 촉진할 것이 틀림없는 업종별협회를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측은 현재의 노조가 공공산별노조에 가입하는 데에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업종별 노사정협회는 노조의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을 크게 한다는 것이다.
- 한편, 전력산업 노사관계는 각 기업의 공통분모가 크지 않으며 또 현실적으로 현재의 불신이 만연한 조건에서 협의체제 가동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시되기도 한다.
- 따라서 발전회사 노무부서의 기본 입장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업 특성상 정부가 참여를 강제하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조건에 놓이

는 것을 가정하고 조사에 응하게 되었다.

- 협의들

- 전력부문에서의 노사정 논의 경험으로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에서는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르는 입장이었고,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특위 내에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언했고 사용자측은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경험 또한 사용자측의 업종별협의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 만약 향후에 업종별협회가 강제된다면 그 틀은 노사가 주도적으로 풀고 정부는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와 공익이 지원하는 체제가 좋을 것이라고 본다. 각 기업이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 그러나 업종별협회의 틀을 노사정위원회 내부에 둘 것인지 외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아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
- 현재의 조사가 현실을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장의 노사관계는 노조와의 현안에 치중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회사 내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발전회사 노사관계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본다.

- 의제

- 구조조정과 가이드라인 문제를 업종별협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문제라서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기 곤란하다. 민영화나 발전/배전재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이런 논의에서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본 적이 없고, 공기업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 사용자측이 업종별협의를 노사간의 장기적인 대화채널로서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와 같은 불확실성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구성된다한들 현재 조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하지만 노사문화가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야 남의 경험이나 좋은 얘기도 따를 수 있는데 발전회사 노사관계가 아직은 그러한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없다. 단적으로 전투적 노조주의 아래에서 이런 식의 대화채널이 유용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 발전회사의 경영자율성
  - 아직은 공기업 노사관계이니까 노동조합이 정치·정책적 이슈를 요구하면 그것은 사용자 권한을 넘어가서 자율적으로는 풀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점을 제외하면 과거보다 억압적인 조직문화는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인사노무 부문에서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와 달리 발전회사들이 경쟁체제로 감으로써 생기는 불가피한 점이다. 경영상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이고 슬림화할 수밖에 없다.
  -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에 놓고먹는 사람들이 즐비한 공기업 풍토가 많이 개선되고 이것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전력요금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측은 원가절감 등 효율경영을 위해 식스시그마, 성과급제, ERP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영체제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 그러나 정부정책이 주된 원인은 아니다. 또한 현재 발전회사들에서 전개되는 경영혁신이 정부 이니셔티브 하에 벌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경쟁체제 하에서는 경영자의 자율적인 혁신노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는 다만 이 경쟁체제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뿐이다. 즉, 경영자 주도의 혁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노사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이 여기에 있으므로 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가서 풀 소지도 별로 없다.

### 다. 전국전력노동조합측

피면접자 : 전국전력노조 정책담당자

일시 : 2006.11.25. 14:00-15:00

- 업종별 노사정 협의의 필요성
  - 원론적으로는 산업별 노사정협의를 대해 찬성한다. 공기업 노사관계는 정부의 예산 및 인력 통제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외려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이다.
  - 아울러 산별노사관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활용의 여지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

측의 공공산별 움직임이 있지만 각 조합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공공산별 건설의 진행이 늦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별 노사정협의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산별노조 건설을 조기에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협의 틀

- 개인적으로는 전력분야로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한 업종으로 보아 총괄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유는 공공부문이 정부가 실제 사용자이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업종 차원으로 노사정협의를 하면 정부가 다시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대로 사용자 대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신별로 ‘공공 부문 노사정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협의 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1999년에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바뀐 게 별로 없다. 법률상으로는 자율성을 부여했다면서도 정부 담당자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간섭한다.
- 예를 들어 임원 인사는 사장이 제청하고 산자부 장관이 임명하는 순서이지만 한 전사장이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고 믿는 사람은 한전 내에 없다. 이러한 자율성은 한전이 유독 심한데 한전만 관리하면 다른 데는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예산통제 문제인데, 전에는 정원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고 각 기관은 정원과 현원상의 여유분으로 임금이 이드라인에 의해 막힌 임금인상분을 보충하였다.
- 그러나 정부 예산지침이 2년 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 내용이란 것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결정보다는 직급별 임금상승율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전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정부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참여는 당연히 중요하다.
-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과거 전력구조조정 당시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관련 노사정협의와 2004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노정협의 등 2가지 협의 경험을 참조하여 말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는 결론과 협약이 나왔지만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의에서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

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조와의 대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재조정자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가 법률적 강제력에 기반하여 그러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결국 협의 틀에서는 4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 둘째, 전력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협의 범위, 셋째, 노사정위원회 내에서의 논의, 넷째, 상설적 협의 등이 그것이다.

- 의제

- 가벼운 의제만을 다루는 협의 틀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려면 제대로 주요 관심 의제를 잡아서 해야 한다. 전력만을 놓고 보면, 단기 의제로 임금가이드라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마다 생산성과 경영실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동결도 감수할 것을 노조도 책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기업에서 방만한 경영은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 임금수준은 옛날보다 나빠졌다.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이 공기업보다 임금이 높다. 이런 불합리한 통제 메카니즘이 임금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편 장기적 의제로는 전력산업구조조정법이나 배전분할 중단 등이 완전 폐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구조개편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력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까지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장애요인

-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결국 정부의 태도라고 본다. 전력의 경우 특히 산자부(업무)와 기획예산처(예산)의 태도가 중요하다. 정부부처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화 상대로서 인정도 신뢰도 하지 않으며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화하지만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 물론 노조들도 문제가 있다. 일부 노조들은 거의 대정부 로비단체로 전략한 느낌을 가진다.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노조가 로비단체로 전략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이런 과정에서 노조들도 무리와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측은 이 때문에 노조를 더욱더 합리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그러나 이 문제를 노조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로비단체로 전락했다고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화 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측

피면접자: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일시: 2006.12.18. 11:00-12:30

#### ●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

- 업종별협의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곤혹스러운 점은 노사정 합의 틀이 유효한가 하는 데에 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활용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직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은 없으며, 논의 하더라도 의견은 엇갈릴 것으로 본다. 참여와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들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려의 목소리가 클 것이다.
- 필요성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산별노조를 조직해서 산별교섭 틀이 완성되고 정부가 교섭석상이 나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단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정부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아울러 업종별 노사정협의를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과거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 경험의 유의미성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본다.

#### ● 협의회

-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가 참여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참여는 당연한 것이다. 또 노사가 권한 밖이라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교섭을 하고 정부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의제

- 의제를 일일이 재단하고 정할 수는 없다. 노동쟁의 대상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걸로 쟁의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노사정이 만나서 논의하는 의제를 따

로 제한하여 정하고 가르면 형식적인 틀만 되고 대화를 위한 대화밖엔 안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의제는 크게 보아 전력산업발전전망과 예산통제 문제로 나뉘어진다. 전력산업 발전전망 내에는 구조개편, 공공성 확대, 환경권 문제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구조개편 문제가 현안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전력, 발전 및 배전, 원자력 부문의 재통합, 민영화 문제 등이 그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 전력, 발전, 원자력의 수직적 재통합은 원칙적인 문제이지만 만약 노조가 다룬다면 엄청난 희생과 내부혼란이 있을 것이라서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다. 만약 정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면 노조측의 의견은 하나의 목소리가 쉽게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문제될 것이다.
- 전력 민영화는 한미FTA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의 효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마도 업계에서는 발전정비시장, 판매시장, 발전시장 등의 민영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편 공공성 확대와 환경권과의 관련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전력수급 전망 속에서 현재는 화석연료와 원전연료가 주인데 이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
- 예산통제의 핵심은 임금가이드라인과 정원 문제인데 개별 사업장 단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성과 통제가 핵심이다. 이를 유연성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

● 장애요인

-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가 노조를 바라보는 태도는, (1) 노조가 산업정책이나 공공성 얘기하면 그건 포장된 구호이고 실제로는 임금인상이나 고용안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거시적 전망이나 공공성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물론 정부의 관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무도 있지만 고유의 이해관계 대변 기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 정도 인정하고 가야할 점이다. 그러나 좀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게 문제다.
- (2) 엘리트주의나 관료주의적 태도는 과거보다 열어졌지만 사람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부처의 담당과장 정도가 발전회사 사장들을 문책하다시피 하고, 지시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외부에 노출해서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안

하무인적 태도가 남아있다.

- (3) 대화를 회피한다. 이들은 노사정 틀처럼 협의를 강제하는 틀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담당과장과 전화해도 ‘만날 이유가 없다. 사용자와 얘기하면 될 문제를 왜 당신들하고 얘기해야 하는가’하는 태도이다.
- 요약하자면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공공성 문제와 노사가 관심을 가진 의제들이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형성하고 우리는 집행한다. 양자의 상호 침투와 이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정책적 책무만 중시하고 그를 수행하는 주체인 노사의 이해관계는 소홀히 하는 것이다. 양자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 노조의 업종별협의에 임할 정책적 전문성이 부족하기는 할 텐데 구조조정 경험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상이 나오면 조합의 정책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을 해나갈 것이고, 틀이 유효하면 정책역량 확보하는 사업으로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 노조는 당장 대략적인 산업발전 전망에 대한 그림을 합의/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에 대응해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정책이 현장에 접목되지 않는 부문이 있고 우리가 고유하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한계 지점을 지적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 (2) 설문조사 결과

#### 가. 업종별협의회 필요성 인정 참여 의사

앞서 면접조사 결과에서 노사가 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노조측의 90.3%(31명 중 29명)이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사용자측의 66.7%(12명 중 8명)은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소속 조직의 업종별협의회 참여에 대한 의견에도 이어져 노조측의 93.5%(29명)가 소속 조직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용자측은 66.7%(8명)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나.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노사정 각 당사자측의 장애요인 평가

#### ○ 노조측 장애요인

노조측 장애요인에 대해서 노사의 평가는 공통성과 차이를 모두 드러냈다. 우선 노사 모두 ‘노조간의 조건과 이해의 차이 및 다양성’이 노조측의 업종별협의회 참여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방침’을 노조의 참여를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본 데 반해, 노조측은 ‘업종별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간주하는 차이도 보였다.

#### ○ 사용자측 장애요인

사용자측 장애요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노사 모두 ‘사용자간의 조건과 이해의 차이 및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은 반면(사용자측 75%, 노조측 34.5%), 노조측은 그 이외에도 ‘사용자 대표성’,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확신 부족’,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 등의 요인들도 사용자측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 ○ 정부측 장애요인

정부측 장애요인에 대한 노사의 판단은 상당히 달랐다. 공통적인 점은 노사 모두 노사측 장애요인보다 정부측 장애요인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조측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결정사항의 이행, 중립성, 추진의지, 지배개입 의도 등 모든 요소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노사가 꼽은 정부측 장애요인의 세부 요소들은 차이가 있었다. 노조측은 정부의 ‘비중립성’(33.3%, 10명)과 ‘업종별협의회에 대한 지배개입 의도’(23.3%, 7명) 등을 정부의 참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은 반면, 사용자측은 ‘정책적 일관성 부족’(41.7%, 5명)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 ○ 노사 공통요인

노사 모두 노사 공통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노사간 신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노조 33.3%, 10명; 사용자 36.4%, 4명). 반면, 다른 요인으로 노조측이 ‘업종별협의회의 위상

과 역할에 대한 노사간 인식 차이'를 중요하게 든데 반해, 사용자측은 '업종별협회의와 업종별단체교섭의 구분의 애매함'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 다. 업종별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 상설화 여부

상설화 여부에 대해서 노사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는데, 노조측의 93.5%(29명)이 상설화에 찬성한 반면, 사용자측의 75%(9명)는 비상설화에 찬성하였다.

#### ○ 구성 주체

구성 주체에 있어서는 노조측이 노·사·정 내지 노·사·정·공익을 선호한 데 반해(각각 35.5%, 11명), 사용자측은 노·사·정·공익을 더 선호하였다(66.7%, 8명). 하지만, 구성주체에 있어서 노사의 의견이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

#### ○ 정부 및 공익대표의 참여방식

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 단일 의견으로는 노사 모두 '노사의 주도'와 정부 및 공익대표의 협의 참석'을 가장 선호하였지만(노 26.7%, 사 33.3%), 노사 모두 다른 의견들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사용자측이 정부나 공익의 적극적 참여를 선호한 반면, 노조측은 상대적으로 노사의 주도성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노사의 입장

한 마디로 '논의과정에 참여는 하되, 노사의 주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노사 모두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으며(노 12.9%, 사 16.7%), '정부가 참여나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소수에 머물렀다(노 19.4%, 사 8.3%), '노사의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의 참여'(노 48.4%, 사 58.3%)나 '공익위원 추천 수준의 참여'(노 12.9%, 사 16.7%)와 같이 '노사 주도 협의를 지원하는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수에 이르렀다.

#### ○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노사는 ‘노사정위원회의 주도성 발휘’보다는 ‘과정에 참여는 하되,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선호하였다

### ○ 업종별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간 관계

우선 노조측은 노사정위원회에 업종별협의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한 반면, 사용자측은 역시 과반수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다음으로 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 간의 관계를 ‘노사정위원회 안에 업종별협회를 두자’는 의견과 ‘노사정위원회 외부에 두자’는 의견으로 나눌 경우 사용자측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반면, 노조측은 과반수(64.5%, 20명)가 ‘외부 설치’를 지지하였다. 노조측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노사정위원회 내의 설치가 협의나 이행의 효율성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던 면접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 ○ 업종별협의회의 성격에 대한 노사측 견해

이에 대해서 노사간 큰 차이가 있는데, 노조측이 ‘합의기구’ 성격을 강조한 데 반해 (61.3%, 19명), 사용자측은 ‘협의기구’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75.0%, 9명).

### ○ 업종별협의회에서 다룰 의제

노사 모두 ‘산업 전망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사항’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꼽았다(우선순위 1순위 비율 노 32.3%, 사 41.7%). 그 다음으로는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논의’(우선순위 1순위 비율 노 29.0%, 사 25.0%)이 꼽혔다. 한편, 2순위 주요 의제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노 19.4%, 사 33.3%)과 ‘임금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노 22.6%, 사 8.3%)이 각각 꼽혔다. 즉, 노사의 의제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 없이 ‘산업 발전 전망과 고용조정 관련 사항’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 업종별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산별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 ○ 업종별협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노조측은 ‘합의사항의 이행 보장’, ‘쟁점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신뢰 확보를 위한 사전 대화창구 개설’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지적한 데 반해, 사용자측은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의 모범사례 개발’,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활동 검토’, ‘쟁점에 대한 공

동 조사연구'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사의 견해에서 공통점은 '쟁점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나 '상호 신뢰를 위한 사전 대화 창구 개설' 등을 비교적 중시한다는 점이며, 두드러진 차이점은 '모범 사례 개발'(노 5순위, 사 1순위)과 '합의 사항 이행 보장'(노 1순위, 사 6순위) 등에서 특히 중요도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서 업종별협의회의 성격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에서 보여진 바와 다름 없이 활성화 방안에도 있어서도 노조가 '문제해결 능력'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는 '대화과 점진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마지막으로 노사는 모두 '업종별협의회의 활성화가 산별노조나 산별교섭의 필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노 70.0%, 21명; 사 50.0%, 6명).

### (3) 조사결과의 시사점

●면접조사나 설문조사 결과 모두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 인식이나 참여 의사에 대해서 노조측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 사용자측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노조측이 지닌 긍정적인 태도는 강한 정부 규제로 인해 요구 실현이 어려운 공기업 노사관계에 있어서 업종별협의회가 하나의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사용자측의 부정적 태도는 직접적으로는 노조측의 책임성이나 대화의지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나, 노조 및 정부의 주도에 대한 우려, 현재의 기업중심 노사관계가 크게 변화함으로써 세력관계가 노조측에 유리해 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 차이는 업종별협의회가 노사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해 설치되는 임의적인 기구일 경우 사용자측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조사결과는 업종별협의회 참여에 제약을 가하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노사 모두 자신들의 분권적 구조('개별 노조 및 사용자들 간의 조건과 이해의 차이 및 다양성')가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여기에 노조측의 경우 노사정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참여를 제약하는 또다른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정부에 대해서

는 제시된 모든 측면에서 노사의 불신이 깊다는 점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비중립성과 지배개입 의도(노조측), 정책 일관성 부족(사용자측)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노사간 관계에 있어서는 ‘노사간 신뢰부족’이 두드러진 장애요인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향후 전력산업에서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노사 각각은 현행의 분산적 구조를 보다 집중화 하기 위한 내부적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특히 노조측의 연대활동의 활성화 정도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신뢰 확보를 위한 예비적 노력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별협회에 대한 노사의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의 노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업종별협회의에서의 정부 역할, 노사의 관심 의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참여 수용 자세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업종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엇갈리는 점도 있지만 공유하는 지점도 발견되고 있다. 첫째, 업종별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고 볼 수 있다. 노조측이 관심 사안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설적 협의기구를 기대하는 데 반해 사용자측은 대화와 협의에 초점을 맞춘 사안별 비상설기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면, 구성주체, 정부 역할, 의제 등에 관해서는 노사간 차이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와 공익이 지원하는’ 형태의 구성과 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관심 의제에 있어서도 양자 모두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 발전 전망과 고용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만, 업종별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결과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노조측이 노사정위원회 외부에서의 협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전력산업의 노사가 바라는 의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협의가 가시화되려면 정부와의 협의는 긴요하며, 정부의 협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노사정위원회법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와의 긴밀한 관계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노사 모두 노사정위원회 틀 내에서의 협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정부의 협의 참여는 강제하되 노사의 자율적 운영권을 존중하는 틀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하면, 첫째, 전력산업에서의 업종별 노사정협의의 주요 추진 동력은 노조측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기업 노사관계 상의 권리제약 해소와 집중적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업종별 노사정협의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용자측의 경우 대정부 관계에서 사용자 권한의 강화 등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집중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전망에 대한 설득이 협의 참여에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사 모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태도와 의지가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인데, 정부의 경우 노사와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의 노사정협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는 업종별노사정협회가 정부가 희망하는 내구적인 노사안정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방적인 억제 대신 노사에게 공동의 규율(joint regulation)을 허용하는 대신 이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예측가능하게하고 순화시킬 수 있다는 다윈주의 노사관계의 가정을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Flanders, 1968; Blyton & Turnbull, 1998). 노사정위원회나 공익위원은 노사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정보와 협의 스킬을 충실히 제공하는 어드바이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노사가 업종별협의회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각자 다른 기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장차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계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측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화를 위주로 하는 '연성(soft)' 협의나 합의만을 중시하는 '경성(hard)' 협의 어느 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으며, 양자를 조합한 복합적 기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현재의 분산적이고 불신이 확산되어가는 노사관계 양상 역시 업종별 협의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노조측의 경우 업종별협회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서비스노조주의에 대한 관심, 하부통제력 및 의사결정 집중성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측 또한 타율적 자세나 기업중심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선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사 모두 상호 신뢰와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행과 태도 상의 노력을 각별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3. 전력산업 업종협의회 구성 검토

#### 1) 검토사항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내 업종별협의회 관련 논의에서는 업종협의회 구성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업종협의회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대표성, 정책협의 경험 등을 다루었으며, 노사정의 업종협의체 구축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업종차원 노사단체의 대표성과 하부구속력이 취약하며, 업종차원의 정책협의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을 업종별협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지적하였다(노사정위원회 업종별협의회 구성 T/F, 2005). 은수미(2006)는 파편적인 노사관계 하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 자율과 포섭에 기초한 ‘통합성’의 원리, ② 위기의식 등의 외부적 요인, ③ 대표성으로서의 민주적 연대성, ④ 사회적 의제형성에서의 포괄성과 상호주의, ⑤ 정부의 적극적 태도 등을 들고 있다. 그녀는 국내의 사회적 대화가 사회협약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맺는데는 강한 외부적 압력과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우선적인 요소였던 반면, 출현한 사회적 대화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전력산업 관련 업종협의회의 원만한 구성과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의 조건과 환경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노사 당사자의 조건으로 업종협의회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태도, 노사의 구조와 상호작용 특징, 협의 경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1) 앞선 언급했듯이 노조의 기본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반면 사용자측의 태도는 다소 부정적이다. 노조의 긍정적인 태도는 비교적 사안인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대정부 협상 가능성,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적 결정 전망, 산별노사관계 촉진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것인 반면, 사용자의 부정적인 태도는 노사정협의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 가능성, 산별노사관계 촉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 때문에 이 부문에서 업종협의회의 가능성은 노조측의 기대를 여하히 충족시키고 사용자측의 우려를 적절히 불식시킬 수 있는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업종협의회의 구성방식이나 의제에 관해서는 노사의 견해 차가 크지 않아서 양측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일정하게 해소된다면 원만한 운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노사의 구조와 상호작용 특성에 있어서 한국전력의 분할 이후 분권성이 더 확대되고 대립성이 확산되어 온 점은 업종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기업간 관계와 노사관계가 전에 비해 퇴색은 했지만 여전히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계열화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이고 노조들 내의 권위가 전국전력노조와 한국발전노조로 이원화되는 양상이어서 이를 극복하고 조기에 새로운 구조적 집중성을 시현할 수 있는 지가 업종협의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전력산업의 노사는 전력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경험이 노사의 업종협의회 참여에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노사의 공공특위 참여가 업종별 노사정협의를 위한 포괄적인 수준의 경험이 아니었음에도 이 경험이 업종협의회에 대한 각자의 기대를 고착시키는(anchoring) 역할도 하고 있음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다.

한편, 노사를 둘러싼 환경으로는 주요한 구조적 환경으로써 정부의 통제 관행 및 태도, 그리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상황적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그간의 노사정협의 경험에 따르면 정부의 통제 관행과 노사정협의를 위한 수동적 태도가 원활한 노사정간 협의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김태현, 2004; 은수미, 2006; 정이환·임상훈, 2003). 이는 노사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노사가 지적하는 정부의 문제점으로는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사용자의 정상적 역할을 제약한다는 점, 공익 대변 혹은 공적 통제에만 치중하여 배후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당사자간 대화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이다. 좀더 넓게 보면, 행정시스템 내부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이나 경영평가지침에 대해 사실상의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집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라든가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의 사용자적 역할과 공익적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그러하다(박태주, 2001; 임상훈, 2006). (2) 한편, 업종별 노사정협의를 위한 노사관계의 상황적 환경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정치적 상황구속성(political contingency)'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갖는데 현재 시점이 집권세력 재편을 앞두고 있어서 노사 모두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노사정협의 예로 볼 때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의 도래는 당사자들의 위기의식을 높여 위기탈출을 위한 상호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위기의식을 촉진하는 또다른 계기로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체제의 제도적 전환이 3년간 유예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예 이전에 노조측은 '전력연대'를 통한 전력산업 산별노조 건설, 산별 공동교섭의 제안 등 급속도로 조직 집중화



를 위한 시도를 벌였으나 유예 이후 노조측의 조직 집중화 노력은 이완되었다. 하지만 3년 유예된 데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체제의 전환에 따른 위기의식은 이후 노조측의 조직 집중화 노력을 재추진하게 할 것이다. 셋째, 역시 노조측에 관련된 상황적 환경으로 '전력연대' 소속의 일부 노조가 가입된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산별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조측의 조직 집중화 노력에 중요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약하면, 노사의 대표성이나 집중성에서의 취약성, 정부의 노사정협의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 등 구조적 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약점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상황적으로는 향후 수년간 노조측을 중심으로 한 노사의 위기의식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사자들의 정책협의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취약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와 달리 사용자측의 전략적 선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현재는 기업중심의 노사관계를 통한 노사관리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조측 역시 집중화 방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성격상 두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보다도 정치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의 정책협의를 위한 의지가 재확인될 때 보다 투명해 질 것이다.

### 2) 협의체계 검토

노사정위원회 내에서의 업종협의회 논의는 업종협의회 설치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주로 참고하면서 전력 부문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협의구조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 전력산업 업종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면접조사과 설문조사 결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의 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제도와의 긴밀한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노조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구심을 감안하더라도 노사 대표구조의 취약성을 비롯한 여타 조건들을 고려할 때 노사정위원회와 독립된 업종별협회는 사용자측이 불응할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현실성이 적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와의 제도적 관계는 분명히 하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관계 설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은 노사정위원회 내에 상무위원회가 관장하는 단위

중 하나로 업종별협의회를 설치하고, 잠정적으로 금속, 금융, 교육, 운수, 보건의료, 그리고 공공부문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중 공공부문협의회는 공무원 분과와 공공기관 분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 분과는 잠정적으로 기관 성격(공기업(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출연기관/위탁기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만일 향후의 업종협의회 설치안이 기관성격별 분과 설치를 엄격하게 따른다면 공기업이되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이 섞여있는 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이 단일한 업종협의회를 구성할 가능성은 없으며, 사안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공공기관 공기업 (소)분과 내에서의 기관성격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향에 따라 업종별 (소)협의체 형성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주어질 경우 전력부문 업종협의체 형성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존의 설치 운영방안은 앞의 6개 업종에서 시범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한 다음 필요에 따라 단위 협의체 구성 숫자를 늘려가기로 했으므로, 당분간 공공부문 협의회는 분과수준까지만 조직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운영방안은 공공부문협의회를 상설체인 본회의와 비상설체인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 의제 발의와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분과위는 협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따를 때 전력산업 수준의 (소)업종별 상설 협의체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가동될 전망은 당분간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분과위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비상설적인 협의 가능성만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조만간 전력부문의 노사가 업종별협의체를 구성하려 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는 모호해지며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전력산업에서 업종별노사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노사가 의제를 개발하여 공공부문협의회 내에서의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노사정위원회 외부에서 노사정위원회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관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후자의 방식을 따를 경우 노사정위원회 안에 (소)업종별 협의체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지원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지원책 혹은 일종의 육성프로그램 (incubator program)이 가동되어야 한다.

(2) 참여 당사자의 구성과 역할: 노사정위원회 업종협의회 운영방안(2005)은 업종협의회 참여 당사자로 노조,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부문협의회의 참여

당사자로 전국 규모 노동단체의 추천자,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 추천자, 관계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협의회 위원과 외부인사로 혼합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력업종협의회 구성시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전력부문 노사관계에 밝은 공익 전문가의 부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참여당사자의 역할에 있어서 전력산업 노사의 다수 의견은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와 공익이 책임있게 참여하되 지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역할의 차별화는 전력업종협의체가 노사정위원회와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노사정위원회 틀 내에 편입될 경우 노사의 바램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단, 노사정위원회 틀 내로 편입될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참여와 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이점은 더 커질 것이다.

참여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 범위(scope)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에서 전력 부문 차원이 아닌 공공부문 전체 혹은 에너지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 틀을 제안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정부의 소관부처나 전력부문과 가스 및 지방난방부문 간의 기업간 관계를 고려할 때 검토의 여지가 있다.

(3) 상설화 : 상설화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상설화를 선호하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비상설적인 사안별 협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능 및 다루게 될 의제와 생산적 산출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보여진다. 단기적으로는 노사의 여건이나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때 상설화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노사 양측의 협의에 대한 준비정도, 논의할 의제의 개발,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준비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방향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능 : 사회적협회는 △전력 관련 정책 자문 및 협의, △예산편성지침 협의 및 조율, △경영평가지침 협의 및 조율, △기타 갈등을 야기할만한 노사간 현안 공동 검토 및 대책 마련, △서비스 공급 관련 시민 편익 도모 관련 사업 협의, △공기업-부처간 관계 모니터링 등을 주된 역할로 할 필요가 있다. 이중 예산편성지침이나 경영평가지침에 대한 협의와 조율은 전력 부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공공부문협의회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능이며 나머지 기능이 전력업종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5) 의제 : 의제에 관해서 특히 노조측은 부드러운 접근(soft approach)보다는 적극적 접근(hard approach)을 선호하고 있다. 즉, '당장의 주요 관심사를 다룰 수 없는 협의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측이 이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구조개편과 예산통제 문제가 기업 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주요 이슈라는 점에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전력 부문에 특정한 이슈라면 예산통제 문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된 문제여서 논의의 대상이 되더라도 업종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된 경영혁신지침 관련 사항들도 역시 기존의 공공특위와 같이 공공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들을 통해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 의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구조개편에 제한하기 보다는 전력산업발전전망이라는 지향성을 지닌 큰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 논의 가능한 사안들로는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 5장. 보건의료 업종협의체 필요성과 구축방안

### 1.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의 추이와 현황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는 지난 2004년도부터 산별교섭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1998년도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하여 출범시켰던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2004년 이전까지 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사용자단체가 구성됨으로써 2004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산업별 노사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산별교섭을 예로 살펴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7개 특성(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2개 사업장을 대표하는 15명의 사용자대표(충남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원주의료원, 사랑병원, 소화아동병원, 울산동강병원, 성남중앙병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가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 등 다섯 개 부문 협약을 12월 27일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 5월의 노사 대표자 간의 상견례 이후 약 15차례의 실무교섭과 수차례의 특성별 임금 협의를 진행한 결과이다.

보건의료산업의 산업별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교섭 개시 후 3개월 만에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조정신청, 노동조합의 총파업 등이 있었다. 그러나 막판 직권중재가 있기 전에 교섭이 급진전되어 2006년도에 3년차 산별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산별협약 잠정 합의 이후 지부별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06년 10월 현재 대상 지부의 약 90%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다.

3년차 산별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산별기본협약에서는 2007년도의 산별교섭을 대비하여 사용자단체를 2006년 말까지 구성하고, 사용자단체 구성 전에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산별교섭 대상과 안건,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협약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예산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공보험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병원 내 건강보험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병원 식당과 환자식 등에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노사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였다. △고용협약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의 개선과 고용보장, 단계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임금협약에서는 특성별로 임금인상률을 확정하고(임금총액 대비 약 3.5%~5.5%),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격차를 줄이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임금인상률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였다. △노동과정협약에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외래진료 최소화와 필요인력 충원, 기존 근무시간별 인력 축소 금지,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과 사회적 부담을 위한 사회적 지원 요청,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 보장,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약 내용의 특징은 산별 교섭이 업종별협의회의 의제들을 다루기 위한 기본 장치의 마련하기 위한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주 요구사항인 의료공공성 확보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단지 노동조합 측에서만 요구가 아니라 병원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공공성은 단지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차원의 의료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료공공성 문제는 노·사·정 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6년도 협약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산별 교섭이 노·사·정 협의의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논의가 정부를 협의 테이블로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산별교섭은 정부가 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의 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점은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업종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업종별협의회가 구성되는 방식 또는 그 현실성에 대한 노·사·정의 태

도 또는 입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2. 보건의료산업 노사정협의의 필요성과 수요 검토

#### 1) 필요성 검토

보건의료산업 노사정협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산업의 산업적 특성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산업은 사회적 가치재, 필수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노사관계법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의료기관은 설립자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운영에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보건의료산업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자 간의 관계 틀로만 설명할 수 없다. 보건의료산업의 노사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의료기관의 영리 및 의료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공공성 영역뿐만 아니라 산별협약의 여타 부분들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보건의료산업에서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이 다른 여타 산업들에 비해 매우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산업·업종에서 노·사·정 간의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협의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정부가 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다면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특별위원회 참여를 관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가 참여하지 않는 특별위원회가 결정권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노사정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정부 측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협의회가 유력한 대안일 수 있으나, 이미 서술하였듯이 민주노총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노조가 공식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 노사의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도록 한다.

### 2) 보건의료산업 노사정협의의 수요 검토

#### 가) 면접조사 결과

##### (1) 사용자측

- 피면접자 : 사립대병원 노무담당자
- 일시 : 2007. 1. 4. (전화면접)

##### ○ 내용

-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임. 이미 산별협약을 통해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노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실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므로, 별도의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임.
- 노사가 합의한 노사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임. 특별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다양한 내용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 기획예산처가 책임 있는 대표로 참여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도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협의회에서 노사정이 협의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단 정부 측 유관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종별협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 (2) 노동조합측



□ 피면접자 : 지역본부 상근간부

□ 일시 : 2007. 1. 5. (방문면접)

### ○ 내용

-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찬성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별교섭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나 의료공공성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움. 대사용자 교섭은 대체적으로 기본 복지교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기업별 교섭 때부터 기업 차원에서 처리되어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업종별 협의회에는 정부가 참여해야 함. 노사가 공동으로 요구할 사안이 많음. 초기업단위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기업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조합에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도, 실질적인 협의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거리가 만들어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임. 노사정위원회에서 판을 까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봄. 활용의 문제임.
- 조직력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업종별 협의회 구성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음. 오히려 업종별협의회가 잘 운영된다면 조직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임.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한국노총쪽 노동조합들과도 협조가 원만하므로 같이 결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임.
- 산업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대부분이 여성사업장인 보건의료업계에서 육아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용자와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2,3차 진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함. 2차진료기관이 죽어가고 있음. 1차기관은 외래, 2차기관은 입원, 3차기관은 연구개발 식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보험의 도입은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시급함. 과잉설비투자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임.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노사정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임. 이러한 내용들이 노사정협의의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함.
- 주요 의제로서 의료산업의 시장화(영리법인화)를 방지하고 공보험을 강화하는 등 무상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함.

-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 민주노총의 대정부 관계 등은 노사정 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있어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음. 정부와 사용자는 협의·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음. 그런데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는 공통의 의견을 갖는 측면도 있음. 특히 2차진료기관의 경우 노·사 공히 국고지원 강화 즉 의료예산 증액, 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이에 비해 3차진료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영리법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저지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법제화가 중요함. 다시 말해 논의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그것의 실현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건강보험수가와 관련된 논의의 경우 시민대표, 공단,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처럼 노사정 협의회도 그 정도의 위상을 갖는 것이어야 함. 그래야 노동조합도 그 협의 틀에 들어가려 할 것임. 합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적용·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렇지 않으면 육만 먹고 실익은 전혀 없을 수도 있음.
- 사용자 측의 대표체를 구성하는 일이 쉽지 않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 오히려 사용자 추천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이 쉽지만, 이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임. 기획예산처의 참여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만약 업종별 협의회가 다수로 구성·운영된다면 기예처가 모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임.
-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 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따라서 일단은 업종별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를 주로 담당한다는 이미지가 강함. 산업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차후에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통합 운영을 시도해야 할 것임.

□ 피면접자 : 사립대병원 지부장

□ 일시 : 2007. 1. 9. (방문면접)

### ○ 내용

- 수도권 지역에서 병상 증축 등 경쟁이 강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서 과잉진료가 만연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건강 관련된 정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함. 병상수 증가를 허가하지 않고 지방으로 유도하며, 저소득층 등이 활용할 요양병원 등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노조는 노사정특별위원회를 요구하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었지만, 정부가 들어오지 않고 있음. 중소병원,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병원 등의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노동조합은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협의 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결국 정부가 노사정간의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임.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노동조합의 발언권이 거의 없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에서 업종별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그래야 논의의 결과가 현실성, 실현을 담보할 수 있음.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위원회 문제가 해결되면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임.
- 현재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보고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것 말고도 다른 협의회,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부 주도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노사정위원회와는 별개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현재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도 들어와야 할 것임. 노사정 위에서는 가능할 것임.
- 교섭은 주로 임금·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주된 의제로 하고 업종별협의회 또는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어야 할 것임. 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노·사가 합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요구하면 될 것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음. 이들 어려운 병원일수록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큼. 우선 노사의 공통분모가 있는 사안부터 정부에 요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봄. 현재로서는 교섭과 협의를 구분·분리하는 의미가 충분함.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확고하게 서고, 민주노총이 이에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임. 그러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임.

### 나) 설문조사 결과

<표 5-1> 업종차원 산업정책, 현안 등 논의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항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전혀 불필요	0	0.0	2	11.1	2	5.6
필요치 않은 편	3	16.7	0	0.0	3	8.3
필요한 편	12	66.7	10	55.6	22	61.1
매우 필요	3	16.7	6	33.3	9	25.0
Total	18	100.0	18	100.0	36	100.0

-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업종별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4%에 불과함.

<표 5-2>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소속 조직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항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전혀 불필요	0	0	1	5.6	1	2.8
필요치 않은 편	3	16.7	2	11.1	5	13.9
필요한 편	14	77.8	10	55.6	24	66.7
매우 필요	1	5.6	5	27.8	6	16.7
Total	18	100	18	100	36	100

-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소속 조직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약 16%에 불과함.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5-3>업종별 협의회 구성에서 가장 장애가 된 당사자

항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노동조합	3	15.8	0	0	3	7.9
사용자	1	5.3	2	10.5	3	7.9
정부	0	0	1	5.3	1	2.6
노·사	4	21.1	3	15.8	7	18.4
노·정	1	5.3	0	0	1	2.6
사·정	1	5.3	5	26.3	6	15.8
노·사·정	9	47.4	8	42.1	17	44.7
Total	19	100.0	19	100.0	38	100.0

-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서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당사자로 노·사·정 모두를 약 45%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표 5-4>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주체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

구분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노조 요인	(1)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조 대표성 부족	5	27.8	1	5.3	6	16.2
	(2) 업종협의회에 대한 노조의 부정적 인식태도	3	16.7	3	15.8	6	16.2
	(3) 업종협의회 합의·결정 이행 확산부족	2	11.1	6	31.6	8	21.6
	(4) 업종협의회 민노총 상급단체 부정적인식방침	4	22.2	2	10.5	6	16.2
	(5) 노조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4	22.2	7	36.8	11	29.7
	Total	18	100	19	100	37	100
사용자 요인	(1) 사용자단체권한미비로 사용자대표성 부족	2	11.8	4	25	6	18.2
	(2) 업종협의회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4	23.5	0	0	4	12.1
	(3) 합의·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확산 부족	3	17.6	4	25	7	21.2
	(4)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1	5.9	3	18.8	4	12.1
	(5)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7	41.2	5	31.3	12	36.4
	Total	17	100	16	100	33	100
정부측 요인	(1)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4	25	5	27.8	9	26.5
	(2) 협의, 합의 등 결정사항의 불이행	1	6.3	2	11.1	3	8.8
	(3)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0	0	8	44.4	8	23.5
	(4)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 미비	11	68.8	3	16.7	14	41.2
	Total	16	100	18	100	34	100
노사 공통의 요인	(1) 업종협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4	26.7	7	38.9	11	33.3
	(2) 현안문제 우선순위에 대한 노사간 강조 차이	5	33.3	2	11.1	7	21.2
	(3) 업종수준의 노사간 대화와 협의의 경험부재	3	20	2	11.1	5	15.2
	(4)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	3	20	7	38.9	10	30.3
	Total	15	100	18	100	33	100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주체별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 노조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노조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이 가장 많은 약 30%의 응답을 보였으며, 노동조합 응답은 ‘업종협의회 합의·결정 이행 확신 부족’이 약 32%, 사용자 응답은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조 대표성 부족’이 약 28%로 높게 나타남. △ 사용자 요인으로는 노조 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이 가장 많은 약 36%의 응답을 보임. △ 정부측 요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의 미비’가 가장 많은 약 41%의 응답을 보임. 주체별로 다른 응답결과를 보였는데, 사용자 응답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의 미비’(약 69%)가 가장 많이 지적된 반면, 노동조합 응답에서는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약 44%)가 가장 많이 지적됨. △ 노사 공통의 요인으로는 ‘업종협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와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이 각각 3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표 5-5>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방식에 대한 선호

항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1) 비상설 기구로 설치, 현안문제 한시적 운영	7	41.2	1	5.3	8	22.2
(2) 상설기구로 설치, 정기회의 안건제출논의	10	58.8	18	94.7	28	77.8
Total	17	100.0	19	100.0	36	100.0

-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사용자는 상설기구화, 비상설기구화에 대한 응답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은 거의 대부분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측 응답에서도 상설기구화에 대한 선호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상설기구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표 5-6> 업종별협의회 구성 주체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Col %	Count	Col %	Count	Col %
(1) 노·사 대표	2	11.8	1	5.3	3	8.3
(2) 노·사·정 대표	8	47.1	5	26.3	13	36.1
(3) 노·사·공익 대표	0	0.0	2	10.5	2	5.6
(4) 노·사·정·공익 대표	7	41.2	11	57.9	18	50.0
Total	17	100.0	19	100.0	36	100.0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 업종별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사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선호 또는 정부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게 나타남.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임. 문제는 정부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임.

<표 5-7> 정부 및 공익대표의 참여 방식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1) 노·사 주도적 역할, 공익대표 참석	3	16.7	2	10.5	5	13.5
(2) 노·사 주도적 역할, 정부대표 참석	4	22.2	1	5.3	5	13.5
(3) 노·사 주도적 역할, 정부·공익대표 참석	2	11.1	9	47.4	11	29.7
(4) 노·사·정 주도 역할, 공익대표 참석	3	16.7	3	15.8	6	16.2
(5) 노·사·공익 주도 역할, 정부대표 참석	2	11.1	2	10.5	4	10.8
(6) 노·사·정·공익 동등하게 참여	4	22.2	2	10.5	6	16.2
Total	18	100.0	19	100.0	37	100.0

- 정부 및 공익대표가 업종별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 응답의 경우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노동조합 측 응답의 경우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정부와 공익대표가 참석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조합측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5-8>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정부(관계부처)의 역할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1) 논의주체로서 주도성 발휘하고 적극 참여	7	38.9	3	15.8	10	27.0
(2) 과정에 참여하되 노사자율적논의 지원	6	33.3	14	73.7	20	54.1
(3) 노사협의 지원위한 공익위원 추천	2	11.1	1	5.3	3	8.1
(4) 협의회 논의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수준	2	11.1	0	0.0	2	5.4
(5) 노사간 자율영역이므로 참여개입 불가	0	0.0	1	5.3	1	2.7
(6) 기타	1	5.6	0	0.0	1	2.7
Total	18	100.0	19	100.0	37	100.0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정부 관계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노사 자율적인 논의를 지원하는 방식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용자의 경우에는 논의주체로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노사 공히 정부 특히 관계부처의 협의회 논의 참여를 원하는 반면, 그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9>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1) 매개자로서 주도성 발휘, 적극 조정역할	11	61.1	5	26.3	16	43.2
(2) 과정참여, 당사자 자율적논의 지원수준참여	5	27.8	9	47.4	14	37.8
(3) 당사자협의지원위해 공익위원 추천 수준	2	11.1	1	5.3	3	8.1
(4) 당사자협의·협의회사업위한 예산지원 수준	0	0.0	1	5.3	1	2.7
(5) 당사자논의 필요한 자료제출조사연구 방식	0	0.0	3	15.8	3	8.1
Total	18	100.0	19	100.0	37	100.0

-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매개자로서 주도성을 발휘, 적극적으로 조정역할 수행’과 ‘과정에 참여는 하되 당사자 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가 주되게 지적되었는데, 응답 주체별로 차이를 보여서 사용자는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반면, 노동조합측에서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0> 노사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협의회 설치에 대한 입장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Col %	Count	Col %	Count	Col %
(1) 매우 부정적	0	0.0	1	5.3	1	2.7
(2) 부정적인 편	3	16.7	3	15.8	6	16.2
(3) 긍정적인 편	13	72.2	13	68.4	26	70.3
(4) 매우 긍정적	2	11.1	2	10.5	4	10.8
Total	18	100.0	19	100.0	37	100.0

- 노사정위원회 안에 의제별·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사 공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 부정적인 응답은 약 19%에 불과함. 특히 노동조합측 응답의 경우 노동조합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노사정위원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호의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5-11>업종협의회와 노사정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	Count	%	Count	%
(1) 노사정위원회 안에 업종별 협의회 설치	10	55.6	2	11.1	12	33.3
(2) 노사정위원회와 별도로 업종협의회 설치	4	22.2	3	16.7	7	19.4
(3) 별도 설치후 필요시 공동으로 논의 진행	4	22.2	11	61.1	15	41.7
(4) 별도 설치후 적절한 시기에 (1)방식으로	0	0.0	1	5.6	1	2.8
(5) 기타	0	0.0	1	5.6	1	2.8
Total	18	100.0	18	100.0	36	100.0

- 업종별 협의회와 노사정 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용자측 응답은 노사정위원회 안에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하지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반면, 노동조합측 응답은 별도 설치후 필요시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

<표 5-12>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그 성격에 대한 입장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Col %	Count	Col %	Count	Col %
(1) 업종별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협의기구	12	66.7	6	33.3	18	50.0
(2) 의제 논의, 관련 사항을 결의하는 합의기구	6	33.3	11	61.1	14	47.2
(3) 기타	0	0.0	1	5.6	1	2.8
Total	18	100.0	18	100.0	36	100.0

- 업종별협의회의 성격에 대한 입장은 노사 주체별로 차이를 보였음. 사용자의 경우에는 협의기구적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경우 합의기구적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업종별협의회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보면, 노사관계안정,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응답(27.0%)을 보였으며, 그 외에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13.5%),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10.8%) 등에 대한 선택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보면, 응답자들이 업종별협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 의제들은 대부분 산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별교섭의 주요 의제들인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정은 아직 산별 교섭과 업종별 협의회의 구분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있고, 또 아직은 산별 교섭 내에서 업종별 협의회의 의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5-13>업종별 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의제의 중요도 (중복응답처리)

의 제 구 분	사용자	노동조합	계
(1) 노사관계안정,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1 (30.6)	9 (23.7)	20 (27.0)
(2)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3 (8.3)	5 (13.2)	8 (10.8)
(3)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에 관한 사항	3 (8.3)	2 (5.3)	5 (6.8)
(4)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11.1)	1 (2.6)	5 (6.8)
(5)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0 (0.0)	5 (13.2)	5 (6.8)
(6) 임금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13.9)	2 (5.3)	7 (9.5)
(7) 고용유연성에 관한 사항	2 (5.6)	0 (0.0)	2 (2.7)
(8)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0 (0.0)	0 (0.0)	0 (0.0)
(9)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0 (0.0)	1 (2.6)	1 (1.4)
(10)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3 (8.3)	7 (18.4)	10 (13.5)
(11) 산업·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	2 (5.6)	4 (10.5)	6 (8.1)
(12) 산업·업종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가이드라인	3 (8.3)	2 (5.3)	5 (6.8)
전 체	36 (48.6)	38 (51.4)	74 (100.0)

- 노사간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의제들은 모두 노동조합 측 응답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의제들은 노사가 합의하에 업종별 협의회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의제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의회의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대부분의 의제들이 산별교섭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별교섭 의제의 선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산별교섭과는 달리 업종별 협의회는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노사간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의제들의 경우 더욱 민감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큼.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5-14> 업종별협의회 주요 의제별 노사간 응답 비교

의제구분	사용자			노동조합			전체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1) 노사관계안정,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28	18	1.07	4.67	18	1.24	4.47	36	1.16
(2)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3.94	18	1.00	4.38	16	1.41	4.15	34	1.21
(3)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에 관한 사항	4.06	18	0.80	5.06	18	0.80	4.56	36	0.94
(4)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89	18	0.96	5.17	18	0.62	4.53	36	1.03
(5)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3.72	18	0.67	5.39	18	0.50	4.56	36	1.03
(6) 임금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44	18	0.92	4.06	18	1.35	3.75	36	1.18
(7) 고용유연성에 관한 사항	3.67	18	0.77	3.22	18	1.56	3.44	36	1.23
(8)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3.17	18	0.92	4.44	18	1.04	3.81	36	1.17
(9)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3.83	18	0.79	4.33	18	0.97	4.08	36	0.91
(10)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3.50	18	0.79	5.00	18	0.77	4.25	36	1.08
(11) 산업·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	3.83	18	0.99	4.83	18	0.92	4.33	36	1.07
(12) 산업·업종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가이드라인	3.89	18	0.76	4.11	18	1.32	4.00	36	1.07

\*\* 배경색 처리된 항목은 사용자/노동조합 응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업종별협의회 현실화 또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문항들에 대한 노사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그 중간 점수인 3.5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그 중요도가 높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노동조합의 응답 점수가 사용자의 응답 점수보다 높게 나타남. 단, 총연맹 차원의 업종협의회 참가에 대한 방침 결정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사용자 응답의 경우 중요도가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측 응답은 중요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차이를 보임.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업종별 협의회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 보장’이었음.

<표 5-15> 업종별협의회 현실화·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사 응답의 비교

방안 구분	사용자			노동조합			전체		
	평균	N	SD	평균	N	SD	평균	N	SD
(1) 쟁점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 협의의 기초를 모색하는 활동	3.95	19	0.97	4.56	18	1.04	4.24	37	1.04
(2) 노사공동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조정역할 강화	3.63	19	0.83	4.11	18	0.96	3.86	37	0.92
(3) 노사간 상호신뢰의 확보를 위한 사전 대화창구의 개설	3.89	19	0.88	4.76	17	0.66	4.31	36	0.89
(4) 실현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모범적 사례의 개발	3.74	19	0.65	4.61	18	0.85	4.16	37	0.87
(5)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업종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검토	3.95	19	0.78	4.83	18	0.79	4.38	37	0.89
(6) 총연맹 차원의 업종협의회 참가에 대한 방침 결정	3.37	19	1.01	4.33	18	1.28	3.84	37	1.24
(7) 업종별 협의회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 보장	3.84	19	1.12	5.33	18	0.91	4.57	37	1.26

\*\* 배경색 처리된 항목은 사용자/노동조합 응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표 5-16> 업종협의회 구성이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나 산별교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

항 목	사용자		노동조합		Total	
	Count	Col %	Count	Col %	Count	Col %
(1) 산별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 약해질 것	7	36.8	3	16.7	10	27.0
(2) 산별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 강해질 것	7	36.8	15	83.3	22	59.5
(3) 산별노조·산별교섭과는 무관	5	26.3	0	0.0	5	13.5
Total	19	100.0	18	100.0	37	100.0

- 업종협의회 구성이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나 산별교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사가 차이를 보임. 사용자 응답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산별전환이나 산별교섭 필요성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이 산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업종별 협의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3.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구축 방안 검토

#### 1) 검토사항

보건의료산업의 노사는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주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단 보건의료산업 차원에서의 업종별 협의회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산별교섭만으로 한계를 갖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노사 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사 양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정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의 전망에 대한 생각은 노사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노사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이미 산별협약을 통해서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업종별 협의회의 현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별 조건과 이해관계의 차이와 다양성, 업종별 협의회의 합의·결정 사항

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불신,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의 미비,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노사 간 상호신뢰의 부족 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노사가 공통의 이해관계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협의회 구성 자체가 크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물론 정부 참여의 폭과 깊이가 남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시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협의회가 구성되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의 업종별 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설치하되,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2) 협의 틀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협의회는 참여주체를 노·사·정(+공익)으로 하는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수요 조사 결과를 준용하는 경우, 노사의 주도에 의해 운영되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의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동안 대립적 양상을 노정해왔던 노·정관계를 고려할 때, 특히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가 단기간 내에 변화하지 않고 또 정부의 대노조 입장이 단기간 내에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 설정 문제는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지원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단 현 시점에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업종별 협의회에 참여는 하되 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노·정간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노동조합 측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물론 노·정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된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판을 짜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업종별 협의회가 노사정위원회와 별개로 설치되어 운영되며,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구상될 필요가 있지만, 향후 노

정 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와 통합·운영되거나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전망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업종별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의제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협의회 의제는 일차적으로 산별협약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노사 응답자들이 산별협약 의제와 업종별 협의회 의제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현재 산별협약이 업종별 협의의 성격을 상당한 정도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협의회가 다루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의료공공성 관련 사안이다. 우선 이 문제는 노사가 산별협약을 통해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또 공동으로 정부의 참여를 요청하기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하게는 의료공공성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회에서 이 의제가 다루어진다면 그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산별 교섭 의제와 협의회 의제가 간단하게 분리되리라고 볼 수 없지만, 협의회가 정착하게 되는 경우 협의회 의제는 산별교섭 의제에서 다룰 수 없는 초기 업적, 전국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관련 사안을 주된 것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6장.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3개 업종의 노사정 협의체에 대한 수요 조사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의회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특징적인 것은 노동조합측의 수요가 사용자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했던 각종 업종별 협의체에서의 활동이나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협의회 법개정안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사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나 업종별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정보가 협의회 구성의 당사자인 노사 모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노사정위원회가 자임하고 있는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인식적 토대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다음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서의 장애요인은 크게 보면 노사 모두 상급조직의 부정적 인식과 노사 공히 조직간 상이한 조건과 차이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업종이라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업종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업종별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이의 적용은 해당 업종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 정부측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 부족, 중립성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어떠한 측면에서의 일관성 부족인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정부 정책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해당 산업이나 업종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 틀 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의 실현이나 이행을 둘러싼 신뢰의 확보는 그 다음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노사정이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러리만 섰다는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초기 정보공유의 단계에서라도 정부측의 충분하고 성실한 과정 만들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나 운영방식은 노사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용자측은 비상설, 노조는 상설기구를 선호하며 이러한 차이는 논의 방식이나 결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협의기구, 합의기구로 연결된다. 구성주체는 노사정과 공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이는 업종에 따라 노사, 노사정 공익 등 업종간 편차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업종은 지원적 역할을, 보건의료업종은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전력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업종협의회에서 노-정 주도성 때문에 사용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업종별 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도 이어져 별도설치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각종 정보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업종별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매우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종별 협의회 구성 절차나 단계는 당사자간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로 달리 접근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는 사용자측은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유연성,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등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관련 산업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과 고용안정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의 제기는 그 성격 자체로부터 단기적인 현안보다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업종별 협의회를 현실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업종협의회의 위상을 합의기구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협의기구로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논의 의제가 정부 정책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측이 전향적 태도와 입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협의회 구성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대체로 당사자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자측은 적극적 역할을, 노동조합은 지원적 역할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노동조합 중에서도 보건의료업종은 노사정위원회의 주도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용자와 보건의료업종의 노동조합측 결과를 보면 지원적 역할에 대한 응답이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응답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층적 대화체계를 갖추기



위한 업종협의회의 구성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적극적 조정역할을 자임해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정위원회가 당위적인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업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의 장을 형성하고 동시에 정부와의 정보공유 및 공유과정에서 협의 의제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에 따라 노사정 협의체의 수요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내용이 해당 업종의 노사관계나 산업발전 전망 등에 영향을 미칠수록 정부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선호하는 경향(보건의료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해당 업종의 노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을 경우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진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 상급단체 차원의 태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이나 금속노조가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업종 차원의 노사정협의체에 그대도 반영되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논의와 이를 통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칠 것으로 요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역별로는 일정하게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운영방식, 논의 및 결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 그리고 업종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노사정 협의회의 구성을 일률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건에 따라 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요 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논의 의제, 논의된 의제의 결과에 대한 이행의 문제 등과 관련해 완결된 형태로 전체적인 내용을 동시에 합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협의회를 당장 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즉,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는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반면, 자동차업종의 경우는 노사 모두의 태도, 특히 노동조합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유에 대한 정부의 선행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 또한 업종에 따라 지원적 역할과 적극적 역

할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업종별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태도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달리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된 설득의 대상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필요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과 절차는 일률적일 수 없으며, 업종별 협의회 구성 시기나 방식 등과 관련해서도 업종별 당사자의 태도나 입장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종별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단계로 해당 산업의 전망이나 이에 따른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유, 노사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해당 주체와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주선함과 동시에 지원적, 적극적 역할에 따른 단계별 역할을 스스로 설정함으로써 업종별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노동부(2004), 금속산업 노사교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정승국(2002),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임금·단협교섭”, 『산별노조와 금속노동자 운동』, 정승국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훈 외(2003), 업종별협의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 업종별협의회 T/F팀.
- 은수미(2006),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임상훈 · 배규식 · 강병식(2004),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한국노동연구원.
- 임상훈(2006),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II),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2003),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한국노동연구원(2003), 전력 배전 분야의 노사관계 안정화 및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산업자원부.
- Ghellab, Youcef & Daniel Vaughan-Whitehead eds.(2003), Sectoral Social Dialogue in Future EU Member States: The Weakest Link, ILO · EC.
-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dsw/actListSectors.do;jsessionid=FdfJzsD16q9zyg2yDYsqX1VrThQPT5p1yGDRQZJqZd5GrSRBgnqY!1079946169?d-16544-s=2&sectorCode=SECT12&lang=en&d-16544-o=2&d-16544-p=1](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dsw/actListSectors.do;jsessionid=FdfJzsD16q9zyg2yDYsqX1VrThQPT5p1yGDRQZJqZd5GrSRBgnqY!1079946169?d-16544-s=2&sectorCode=SECT12&lang=en&d-16544-o=2&d-16544-p=1)

<부 록>

설문지

# 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산업·업종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수요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기업의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업종별 협의회 필요성 여부와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노·사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를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업종별 협의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393-1457~9, 016-226-260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홍주환 연구실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업종별 협의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1. 귀하는 업종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1-1. 귀하께서 업종별 협의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문항 1에서 필요 없다(①과 ②)고 하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_\_\_ ① 그 동안 구성되었던 유사한 협의회(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불신  
 \_\_\_ ② 협의회 참석자(단체)의 대표성 취약 및 책임성 부재 (노동조합 측)  
 \_\_\_ ③ 협의회 참석자(단체)의 대표성 취약 및 책임성 부재 (사용자 측)  
 \_\_\_ ④ 협의회 참석자(단체)의 대표성 취약 및 책임성 부재 (정부 측)  
 \_\_\_ ⑤ 정책 협의 문화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 효과의 부재  
 \_\_\_ ⑥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사안이 결정됨으로써 결국 들러리만 서게 될 가능성  
 \_\_\_ ⑦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_\_\_\_\_ )

2. 귀하는 (귀하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귀하가 속한 (대표)조직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반대 한다 ② 반대하는 편이다 ③ 찬성하는 편이다 ④ 매우 찬성 한다

2-1. 귀하께서 업종별 협의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 \_\_\_ ① 협의회에 참여하여 일방적인 결정이 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  
 \_\_\_ ② 협의회에 참여하여 문제제기를 통해서 사회이슈로 만들기 위해  
 \_\_\_ ③ 협의회에 참여하여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_\_\_ ④ 불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여하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_\_\_\_ ⑤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

3. 귀하는 정부가 추진했던 전력산업 배전분할 정책이, 사실상 업종별 협의회 역할에 해 온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의 결의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는 안다   ④ 아주 잘 안다

4. 귀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워크숍, 정책보고서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는 안다   ④ 아주 잘 안다

5. 귀하는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는 안다   ④ 아주 잘 안다

6.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었던 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동조합   ② 사용자   ③ 정부   ④ 노·사   ⑤ 노·정   ⑥ 사·정   ⑦ 노·사·정 모두

7. 업종별 협의회 구성 시 아래 노동조합 측 요인이 장애가 되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   높다

- |   |                       |
|---|-----------------------|
| (1)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             | ①   ②   ③   ④   ⑤   ⑥ |
| (2)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 ①   ②   ③   ④   ⑤   ⑥ |
| (3) 업종별 협의회 합의나 결정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확신부족    | ①   ②   ③   ④   ⑤   ⑥ |
| (4)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 ①   ②   ③   ④   ⑤   ⑥ |
| (5) 노동조합 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 ①   ②   ③   ④   ⑤   ⑥ |

※ 위의 다섯 문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번

8. 업종별 협의회 구성 시 아래 사용자 측 요인이 장애가 되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낮다 ⇔ 높다

- |  |             |
|--|-------------|
| (1) 사용자단체의 권한 미비로 인한 사용자의 대표성 부족       | ① ② ③ ④ ⑤ ⑥ |
| (2)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 ① ② ③ ④ ⑤ ⑥ |
| (3) 업종별 협의회에 합의나 결정사항 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확신부족 | ① ② ③ ④ ⑤ ⑥ |
| (4)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부정적 인식과 방침 | ① ② ③ ④ ⑤ ⑥ |
| (5) 사용자간 조건과 이해의 차이와 다양성               | ① ② ③ ④ ⑤ ⑥ |

※ 위의 다섯 문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번

9. 업종별 협의회 구성 시 아래 정부 측 요인이 장애가 되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 높다

- |                               |             |
|-------------------------------|-------------|
|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 ① ② ③ ④ ⑤ ⑥ |
| (2) 협의, 합의 등 결정 사항의 불이행       | ① ② ③ ④ ⑤ ⑥ |
| (3)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           | ① ② ③ ④ ⑤ ⑥ |
| (4)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주도성 발휘의 미비 | ① ② ③ ④ ⑤ ⑥ |
| (5) 업종별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 의도   | ① ② ③ ④ ⑤ ⑥ |

※ 위의 다섯 문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번

10. 업종별 협의회 구성 시 아래 노·사 공통의 요인이 장애가 되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 높다

- |                                       |             |
|---------------------------------------|-------------|
| (1) 업종별 협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의 인식 차이 | ① ② ③ ④ ⑤ ⑥ |
| (2) 현안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노사간 강조점의 차이        | ① ② ③ ④ ⑤ ⑥ |
| (3) 업종 수준의 노사간 대화와 협의의 경험 부재          | ① ② ③ ④ ⑤ ⑥ |
| (4) 업종별 협의회 기능과 업종(산업)교섭의 구분이 애매함     | ① ② ③ ④ ⑤ ⑥ |
| (5) 노·사간 상호신뢰의 부족                     | ① ② ③ ④ ⑤ ⑥ |

※ 위의 다섯 문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번



업종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11.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설치 방식으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만 이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 ②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 한다.
- ③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_\_\_\_\_ )

12.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 구성 주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노·사 대표
- ② 노·사·정 대표
- ③ 노·사·공익 대표
- ④ 노·사·정·공익 대표

12-1. 업종별 협의회에 정부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 그 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공익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
- ②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
- ③ 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 및 공익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
- ④ 노·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공익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
- ⑤ 노·사·공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
- ⑥ 노·사·정·공익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식

13. 업종별 협의회 구성시 정부(관계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논의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 ② 과정에 참여는 하되 노·사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해야한다.
- ③ 노·사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수준에서 참여해야한다.
- ④ 협의회 논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⑤ 노·사간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면 아니 된다.
- ⑥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_\_\_\_\_ )

14.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 이외의 인사가 참여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그 중요도 순서대로 모두 골라주십시오.

- \_\_\_\_\_ ①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 \_\_\_\_\_ ②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 \_\_\_\_\_ ③ 노사정위원회 관계자
- \_\_\_\_\_ ④ 노사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 \_\_\_\_\_ ⑤ 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관계자
- \_\_\_\_\_ ⑥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 \_\_\_\_\_ ⑦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

15. 업종별 협의회 구성 시 (관계 부처와는 별도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개자로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 ② 과정에 참여는 하되 당사자 간 자율적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해야한다.
- ③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수준에서 참여해야한다.
- ④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의회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참여해야한다.
- ⑤ 당사자 간 논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조사 연구 등의 방식으로 참여해야한다.
- ⑥ 노·사간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면 아니 된다.
- ⑦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

15-1. 귀하는 현재 입법 예고된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별·업종별 협의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인 편    ③ 긍정적인 편    ④ 매우 긍정적

15-2. 업종별 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노사정위원회 안에 업종별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 ② 노사정위원회와 별도로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③ 별도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우선 별도로 설치한 후 적절한 시기에 노사정위원회 안에 업종별 협의회를 둔다.
- ⑤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

## 협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16. 귀하는 업종별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 성격은 다음 중 어느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업종별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협의 기구
- ② 업종별 의제를 논의하여 관련 정책 사안을 결의하기 위한 합의 기구
- ③ 기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

17. 업종별 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의제의 중요도 정도는 어떻습니까?

	낮다	↔	높다
(1) 노사관계안정,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2) 산업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3)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4)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5)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6) 임금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7) 고용유연성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8)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9)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10)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11) 관련 산업·업종의 전망 및 정책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12) 관련 산업·업종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17-1. 위(문 17)의 12가지 항목 중 업종별 협의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2가지를 골라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1순위 \_\_\_\_\_ 번      ② 2순위 \_\_\_\_\_ 번

17-2. 위(문 17)의 의제들 외에 업종별 협의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



---

18. 업종별 협의회를 현실화 혹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들은 각각

## 업종별 협의회 수요에 관한 연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	높다
(1) 쟁점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 협의의 기초를 모색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2) 노·사 공동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조정역할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3) 노·사간 상호 신뢰의 확보를 위한 사전 대화창구의 개설	①	②	③ ④ ⑤ ⑥
(4) 실천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모범적 사례의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5)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업종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검토	①	②	③ ④ ⑤ ⑥
(6) 총연맹 차원의 업종협의회 참가에 대한 방침 결정	①	②	③ ④ ⑤ ⑥
(7) 업종별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19.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기업별노동조합의 산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산별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업종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산별노동조합 전환이나 산별교섭의 필요성이 약해질 것이다.
- ② 업종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산별노동조합 전환이나 산별교섭의 필요성이 강해질 것이다.
- ③ 업종별 협의회와 산별노동조합이나 산별교섭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귀하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20-1.            ① 사용자            ② 노동조합

- 20-2.            ① 자동차산업 (완성차)  
                   ② 자동차산업 (부품)  
                   ③ 전력산업 (발전)  
                   ④ 전력산업 (배전)  
                   ⑤ 보건의료산업 (대형병원)  
                   ⑥ 보건의료산업 (중소병원)